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경제안보 Review

경제안보 분석

2025 미국 국가안보전략서 분석: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경제안보 분석

‘EU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통신문’ 주요 내용 및 분석

경제안보 현안

미국 국방수권법과 경제안보: 투자, 바이오, 조선, 공급망

EWS 공급망 / 에너지 동향

- 트럼프 대통령, 해군력 강화를 위한 ‘황금 함대’ 구상 발표
- 美 USTR, 中 반도체 추가 관세 18개월간 보류 결정
- 엔비디아의 2월 H200 對中 수출 개시 가능성
- 美, 삼성·SK의 中 공장에 대해 ’26년 장비 반입 일괄 승인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온라인 다운로드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게시판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

경제안보 Review - 메일링 서비스 신청

cesfa@mofa.go.kr

목차

[26-1호]

I. 경제안보 분석

이재원 선임전문관

2025 미국 국가안보전략서 분석: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01

1. 개요
2. 2025 NSS의 주요 내용
3. 2017 NSS와 2025 NSS의 비교
4. 평가 및 전망

II. 경제안보 분석

임산호 선임전문관

‘EU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통신문’ 주요 내용 및 분석

09

1. 배경
2. EU 경제안보 강화 문서 주요 내용
3. 평가 및 시사점

부록1. 경제안보 지원을 위한 EU 정책도구 목록

부록2. 6대 경제안보 우선 고위험 영역 및 중점 추진 내용

부록3.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향후 추진 계획

III. 경제안보 현안

최용호 전문관

미국 국방수권법과 경제안보: 투자, 바이오, 조선, 공급망

28

1. 배경
2.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의 경제안보 관련 주요 내용
3. 평가 및 전망

V. EWS 공급망 / 에너지 동향

- 트럼프 대통령, 해군력 강화를 위한 ‘황금 함대’ 구상 발표
- 美 USTR, 中 반도체 추가 관세 18개월간 보류 결정
- 엔비디아의 2월 H200 對中 수출 개시 가능성
- 美, 삼성·SK의 中 공장에 대해 '26년 장비 반입 일괄 승인

2025 미국 국가안보전략서 분석: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이재원 선임전문관

요약

■ 2025년 12월 발표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025년 국가안보전략서(NSS)」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확고한 기조로 제시하고 미국이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패권국으로 행동해 온 기준의 역할을 재고

- ▶ 미국이 아틀라스(Atlas)처럼 국제질서를 떠받치던 시대의 종식 선언
- ▶ 공정성을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무역 불균형, 무임승차, 약탈적 경제 행위를 비판
- ▶ 미국이 부담한 무역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 동맹국에 방위비 증대 요구
- ▶ 경제안보를 우선순위로 제시하고 세부과제로 ▲무역 균형 ▲공급망 확보 ▲재산업화 ▲방산 기반 부활 ▲에너지 지배력 확보 ▲금융 지배력 유지 등으로 구체화
- ▶ 미국과 중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대등한 수준의 경쟁자(near-peers)’ 관계로 변화했다고 평가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21세기의 핵심 경제적·지정학적 격전지로 규정

■ 2017년 국가안보전략서 대비, 2025 NSS는 서반구 중심으로 미국의 정책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고, 강대국 간 경쟁 영역을 경제와 기술로 재규정

- ▶ 경제안보가 국가안보라는 명제를 진화시키면서 강력한 경제력이 군사력의 토대임을 명시하고 제조업 부흥, 에너지 지배, 공정한 무역,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 방산 기반 재건 등을 국가 생존의 필수 요소로 격상
- ▶ 기술과 표준(AI, 양자 등)을 선점하는 것이 세계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평가
- ▶ 관세와 신기술을 전략적 도구로 사용하여 공급망에서 적대국에 대한 의존성 배제 강조

■ 2025 NSS는 미국이 더 이상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패권국이 아님을 시사

- ▶ 미국의 국가전략이 경제안보 전략으로 변모하고, 미국이 이념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면서 선택적으로 개입할 것임을 의미
- ▶ 또한 미국은 공공재를 제공하는 미국의 역할이 변화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 장기적으로는 국제질서가 강대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힘과 계약에 기반한 질서로 변화할 전망

- ▶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경제적·기술적 우위성에 기반하는 군사적 억제력을 확보하고 적대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서반구에서 지위를 확고히 하고 인도태평양에서 동맹의 결집을 계속 요구할 전망

1. 개요

■ 2025년 12월 발표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025년 국가안보전략서」(이하 2025 NSS)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확고한 기조로 제시하고 미국이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패권국으로 행동해 온 기존의 역할을 재고

- ▶ 국내외 주요 싱크탱크들은 2025 NSS가 보편적 가치보다 미국 우선주의와 경제적 실리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해석하고, 주로 서반구를 중시하는 트럼프식(Trump Corollary) 먼로 독트린, 유럽의 소외와 자강론,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유화적 접근, 거래적 동맹관 등에 초점을 두면서 지정학적 불안정성 증대를 우려

■ 한편 2025 NSS는 경제안보를 다시 강조하고 있는바, 동 보고서는 2025 NSS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발표했던 2017 NSS와의 비교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경제안보는 국가안보”라는 명제가 어떻게 심화 발전했는지를 분석

- ▶ 또한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이 사실상 경제안보 전략으로 변모하였고 미국이 패권국가로서 기존의 역할을 다하지 않더라도 개방된 시장 기반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의 경제력과 기술력 결집을 계속 모색할 것으로 전망

2. 2025 NSS의 주요 내용

■ 2025 NSS는 서론, 목표, 수단, 원칙과 우선순위 등 4개 챕터로 구성

- ▶ 서론 : 전략은 목표와 수단을 연결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임에도 냉전 이후 엘리트들은 미국인의 이익과 무관한 글로벌 부담을 떠안고 세계주의(globalism)와 자유 무역에 의존했으나,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이를 교정

- ▶ 목표 : ▲세계 최고의 혁신적인 경제·강력한 산업 기반·선도적 에너지 수출국으로 성장
▲과학기술혁신 및 표준을 주도 ▲지식재산권 보호 ▲연구개발의 프론티어 정신 보존 ▲회복력 있는 인프라 확보 등 제시

※ 그밖에 대내적 목표로 국가의 생존과 주권 보호, 국경 통제, 군사력과 억제력, 소프트파워 활용, 문화적 회복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외적 목표로는 서반구,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에서의 목표도 제시하고 있으나 대외적 목표는 이후 제시되는 지역 전략과 동일

- ▶ 수단 : ▲유연한 정치 체제 ▲세계 최대의 혁신 경제 ▲세계 최고의 금융 시스템 및 자본 시장
▲최고의 혁신적이고 수익성 높은 기술 부문 ▲압도적인 군사력 ▲광범위한 동맹 네트워크
▲풍부한 천연자원 ▲지리적 위치 ▲소프트파워와 문화적 영향력 ▲미국민의 애국심을 국력의 수단으로 구체화

※ 미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글로벌 혁신 지수 3위('25년),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을 미국 빅테크 기업이 차지(Global Market Cap 기준), 전 세계 시가총액의 약 65%를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시장('25년 MSCI ACWI 지수), 세계군사력지수(Global Firepower Index) 1위, 50여개 국가들과의 상호·집단 방위 협정 체결, 80개국 이상에 걸쳐 운영되는 군사 기지 보유, 세일 혁명 이후 세계 최대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 지위 보유

- ▶ 원칙 : 10대 원칙 중 하나로 공정성을 제시하면서 무역 불균형, 무임승차, 약탈적 경제 행위를 비판하고 미국이 부담한 무역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
 - ※ 10대 원칙 : 국익 우선, 힘을 통한 평화(군사력과 경제력을 통한 억제), 선택적 개입주의, 유연한 현실주의 (상호 이익 중시), 국가 우선주의, 주권 수호, 세력 균형(동맹 결집), 미국 노동자 우선, 공정성, 역량과 능력주의의 (특정 집단을 우대하는 DEI 정책 거부 등)
- ▶ 우선순위 : 5대 우선순위 중 하나로 경제안보를 제시하고 ▲무역 균형 ▲공급망 확보 ▲재산업화 ▲방산 기반 부활 ▲에너지 지배력 확보 ▲금융 지배력 유지 등 세부과제로 구체화(표 참고)
 - ※ 5대 우선순위 : 대규모 이민 시대 종결, 핵심 권리와 자유 보호, 부담 공유 및 부담 전가(burden-shifting, 즉 국방비 지출 증대 등), 대통령의 직접 외교를 통한 평화 정책 및 새로운 시장 확보, 경제안보

[2025 NSS에서 제시된 경제안보의 세부내용]

우선순위	세부 내용
경제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 균형 : 무역 적자 해소 및 호혜적 무역 관계 구축 • 공급망 확보 : 핵심 광물 및 부품의 해외 의존 탈피 및 정보기관의 모니터링 • 재산업화 : 관세와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의 미국 복귀(리쇼어링) • 방산 기반 부활 : 저비용 대량 생산이 가능한 현대적 국방 제조 능력 확보 • 에너지 지배력 : 화석 연료 및 원자력을 통한 에너지 자급자족 및 수출 확대 • 금융 지배력 유지 :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와 미국 금융 시장의 우위 보호

■ 2025 NSS는 지역별 세부전략도 제시하면서 서반구에서 미국의 우위를 회복하고 중국과의 경제·기술 경쟁에서 승리할 것임을 천명

- ▶ 서반구에서 미국의 우월성(preeminence)를 회복하기 위해 먼로 독트린을 재확인하고 포섭과 확장(Enlist and Expand) 정책을 추진
 - 비서반구 경쟁국들이 서반구 내에 군대 등을 배치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소유·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

[서반구 포섭과 확장 정책의 내용]

구분	내용
포섭(enli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병력을 서반구로 이동시키는 군사적 재조정 ▲ 해안경비대와 해군력 증강을 통한 해상 및 국경 통제권 강화 ▲ 관세와 무역을 도구로 활용하여 시장을 개척하는 상업 외교(commercial diplomacy) 추진
확장(exp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 자원 식별 및 공동 개발 ▲ 외부 세력의 군기지·항만·인프라 통제 등 차단 ▲ 경쟁국의 위협 활동 폭로(스파이, 사이버 위협, 부채 함정 등) ▲ 민관 협력 강화* ▲ 수출입 은행 등을 통한 전략적 인수 지원 및 단독 공급(sole-source) 계약 추진 등 <p>*모든 미국 대사관과 관료들은 미국 기업이 계약을 체결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업무의 일부로 간주</p>

- ▶ 아시아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이제 '대등한 수준의 경쟁자(near-peers)' 관계로 변화했다고 평가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21세기의 핵심 경제·지정학적 격전지로 규정
 - 미국 우선주의 외교에 기반하여 글로벌 무역 관계의 재조정을 추구하고 동맹국의 중국 과잉생산 문제 및 국영기업에 의한 인프라 구축에 대응할 것을 장려
 - 더 나아가 미국은 경제적·기술적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 대규모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장기적 방법이라고 보면서, 제1도련선 등에서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국방비 증대 및 방산기반에 대한 투자를 촉구
 - 또한 남중국해(전 세계 연간 해상 운송량의 3분의 1 차지)가 미국 경제에 중대한 함의를 지닌다고 기술

[미국의 아시아 지역의 경제안보 전략]

구분	내용
경제적 보호	▲약탈적 보조금 ▲불공정 무역 관행 ▲지식재산권 도용·탈취 ▲공급망 위협(핵심 광물 및 희토류) ▲펜타닐 수출 ▲문화적 전복 활동(프로파간다 등) 문제 등으로부터 미국 경제와 국민을 보호
동맹 결집	▲동맹 기반의 경제 블록 형성(미국 30조 달러, 동맹 및 파트너 35조 달러로 전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 ▲결집된 경제력을 사용하여 약탈적 관행에 대응 ▲경쟁 세력에 의한 동맹국 경제 종속을 방지 ▲인도와의 상업적 관계 개선 ▲쿼드(The Quad: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협력을 지속하여 지역 안보와 경제 균형 모색
연구개발(R&D) 강화	▲AI ▲양자 컴퓨팅 ▲자율 시스템 ▲우주 ▲해저 기술 등 미래 군사력과 경제력을 결정지을 핵심 분야에서 초격차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 ▶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여타 지역에서도 투자와 무역을 강조하는 등 경제안보 측면에서 지역 세부 전략을 조망
 - 유럽의 문명적 소멸(civilizational erasure) 등 비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대서양 무역이 세계 경제와 미국 번영의 핵심적인 기둥 중 하나임을 명시
 - 유럽의 제조업, 기술, 에너지 부문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이며, 첨단 과학 연구와 문화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문화적 요충지라고 평가

3. 2017 NSS와 2025 NSS의 비교

■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발표했던 「2017년 국가안보전략서」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025년 국가안보전략서」를 비교할 때, 두 문서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동일한 기조를 이어가고, 경제안보 실현 방안을 구체화

- ▶ 미국의 주권, 시민의 안전 그리고 경제적 번영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유지하고 심화

- 2017 NSS : 미국 시민의 안전과 번영을 우선시하며, 원칙에 입각한 현실주의(Principled Realism)를 통해 미국의 가치를 보호할 것을 천명
- 2025 NSS : 2017년 트럼프 행정부 1기의 정책을 필수적이고 환영받는 교정으로 평가하고 모든 일에서 미국을 최우선에 둔다는 원칙 재확인
- ▶ 경제안보가 국가안보라는 명제를 진화시키면서 강력한 경제력이 군사력의 토대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2025년 문서에서는 이를 실현하는 방안을 구체화
- 공통점 : 제조업 부활(reshoring, reindustrialization 등), 에너지 지배력(energy dominance), 무역 관계에 있어서의 상호주의(reciprocity)와 공정성 강조
- 차이점 : 2017 NSS가 제조업을 국가적 우선순위(national priority)로 기술한 것과 달리 2025 NSS는 제조업 부흥을 국가 경제 정책의 최고 우선순위(the highest priority)로 격상시켰으며,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주도권 확보, 에너지 지배력 확보, 방산 기반 재건 등을 국가 생존의 필수 요소로 규정

■ 2025 NSS는 서반구 중심으로 미국의 정책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고 강대국 간 경쟁 영역을 경제와 기술로 재규정

- ▶ 지역 순서상 2017 NSS에서는 서반구를 후순위에 두었으나(인도태평양, 유럽, 중동, 남아시아·중앙아시아, 서반구, 아프리카 순), 2025 NSS에서 가장 앞에 배치하고(서반구,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순) 무역 협정 외 공급망 강화, 대외 의존도 감소와 비서구권 영향력 배제도 강조
- ▶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수정주의 국가에서 미국의 경제적 지위를 위협하는 경쟁(near-peer) 관계로 변화
 - 2017 NSS : 중국을 미국의 이익에 반해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수정주의 강대국(revisionist power)으로 규정
 - 2025 NSS : 중국이 미국의 시장 개방을 이용해 부유하고 강력해졌음을 지적하며, 이제는 대등한 수준의 경쟁자로 명시하고 중국의 국가 주도적 자본주의가 시스템을 왜곡했음을 비판하며, 단순한 경쟁을 넘어 경제적 상호주의·공정성 및 미국의 경제적 독립 회복을 위한 강력한 재조정(rebalancing)을 예고
- ▶ 강대국 간 경쟁이 더 이상 군사적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제와 기술 영역에서 미래를 결정짓는 싸움으로 재정의
 - 기술 우위성 : 2025 NSS는 기술과 표준(AI, 양자 등)을 선점하는 것이 세계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평가
 - 비군사적 수단 : 2017 NSS는 국력에 대해 주로 군사력에 집중했다면, 2025 NSS는 관세와 신기술을 전략적 도구로 사용하여 공급망에서 적대국에 대한 의존성 배제를 강조

- ▶ 동맹에 대한 요구 수준을 2017 NSS에서는 국방비 2%, 2025 NSS에서는 5% 수준으로 상향 요구하는 등 더 많은 부담 공유(burden sharing) 및 부담 전가(burden shifting)를 요구
 - 한편 2017 NSS는 국경벽 건설과 법 집행 강화를 통한 국경 통제에 집중하였으나, 2025 NSS는 대규모 이민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면서, 서반구의 안정을 위해 트럼프식 먼로 독트린을 집행하여 이민의 원인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공세적 접근법 제시
 - 에너지 및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훨씬 공격적으로 기후 변화 및 넷제로를 거부하며, 이를 미국의 경제를 해치고 적대국을 돋는 재앙적인 것으로 규정

4. 평가 및 전망

■ 2025 NSS는 미국이 더 이상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패권국이 아님을 시사하며, 이는 미국의 국가전략이 경제안보 전략으로 변모하고, 미국이 이념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면서 선택적으로 개입할 것임을 의미

- ▶ 경제가 궁극적 목적(economics as the ultimate stakes)이라는 동 문서의 소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전략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면서 과거의 강대국 경쟁 틀에서 벗어나 경제를 외교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특히 중국과의 경쟁은 가치나 체제의 충돌이 아닌, 철저한 이익 기반의 경제적 경쟁으로 규정
- ▶ 경제적 수단을 거래적 동맹 관계에 적용함으로써 동맹을 미국이 지불해 온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국방비 지출(GDP 5% 요구)이나 수출통제 협조 여부에 따라 상업적 우대 조치를 차등 적용하는 등 철저히 거래적인 방식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 ▶ 또한 관세를 단순히 무역 장벽으로 보지 않고 전략적 도구로 삼으면서, 동맹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적대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핵심적인 안보 수단으로 활용할 전망

■ 2025 NSS는 미국 패권과 국제질서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며 공공재를 제공하는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역할이 약화되더라도 글로벌 시장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국제질서가 강대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 우려

- ▶ 2025 NSS는 미국이 아틀라스(Atlas)라는 신화 속 거인처럼 전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고 표현하면서 미국이 자발적으로 지난 70년간 유지해 온 국제질서의 설계자이자 수호자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
 - 미국이라는 패권과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는 이론적 설명은 국제질서가 단순히 패권국이 강요한 산물이 아니며 ▲개방성에 대한 이점(FTA 고도화 및 CPTPP 확대 논의) ▲신흥 강대국의 성공 토대(시장을 통한 중국의 부상) ▲대안의 부재(국가 주도 경제 모델의 고비용·비효율성 우려) 등을 이유로 패권의 쇠퇴가 곧 질서의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Ikenberry 2018)

- ▶ 그러나 미국이 패권국가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대신 미국 우선주의와 거래주의적 접근을 앞세우면 2025 NSS에서 제시한 수단과 목표 간 모순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질서가 강대국 중심으로 재편되어 힘과 계약에 기반한 질서로 변화 및 글로벌 시장의 디커플링 가능성도 제기
 - 중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명시함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전략적 활용하면서 동맹을 압박하는 모순을 보여 동맹국들이 미국 대신 중국이나 러시아와 밀착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Atlantic Council experts 2025.12.5.; Fontaine et. al 2025.12.11.)
 - 기술 패권을 강조하면서도 연방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미국의 혁신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비판도 존재(Atlantic Council experts 2025.12.5.)
 - 지나친 관세와 경제적 강압은 타국들이 대체 공급망과 결제 시스템을 찾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와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의 약화로 연결(Anderson et. al 2025.12.8.)

■ 미국은 과거의 패권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경제적·기술적 우위성에 기반하는 군사적 억제력을 확보하고 적대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서반구에서의 지위를 확고히하고 인도태평양에서 동맹의 결집을 계속 요구할 전망

- ▶ 미국은 2025 NSS에서 자국이 스스로 국제질서를 떠받치지 않더라도, 국가적 생존과 번영을 위해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적 억제력의 선순환 구조를 지향한다고 해석되며, 이를 위해 동맹의 결집을 요구
 - 동맹 결집의 구체적 사례로 미국은 팩스 실리카 서밋(Pax Silica Summit)을* 개최하였으며, 강압적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라는 지정학적 컨센서스 아래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간의 공동 번영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USDOS 2025.12.11.)
 - * 한국, 호주, 이스라엘, 일본, 싱가포르, 영국, 미국이 참여한 팩스실리카 선언은 ▲에너지·광물·제조·반도체·인프라 등 공급망 협력 중요성 강조 ▲민간부문 역량 활용 및 민간 투자를 통한 공급망 안정성 확보 ▲신뢰 기반 경제안보 질서 구축 위한 정책공조 강화(외교부 2025.12.13.)
- ▶ 한편 서반구를 미국의 배타적인 영향권으로 확고히 하는 먼로 독트린을 내세우면서 경제적·군사적 수단을 총동원해 중국 등 외부 경쟁 세력의 침투를 배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바, 관련 사례 예의주시 필요
 -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작전을 통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축출한 후 전개될 미국 기업의 석유 산업 진출뿐만 아니라 파나마 운하 통제권, 칠레 해저케이블, 중남미 에너지 공급망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진출을 위한 미국 정부의 상업 외교(commercial diplomacy) 활동 등에 대해 주목할 필요성 다대

참고문헌

- White House. (2017). National security strategy.
- White House. (2025). National security strategy.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5/12/2025-National-Security-Strategy.pdf>
- Anderson, Scott R., Aslı Aydintaşbaş, Pavel K. Baev, Vanda Felbab-Brown, Daniel S. Hamilton, Kari Heerman, Mara Karlin, Patricia M. Kim, Lynn Kuok, Michael E. O'Hanlon, Steven Pifer, Stephanie K. Pell, Landry Signé, Melanie W. Sisson, Constanze Stelzenmüller, Caitlin Talmadge, Tara Varma, Valerie Wirtschafter, and Andrew Yeo. (2025.12.8.). Breaking down Trump's 2025 National Security Strategy. Commentary. Brookings Institution.
- Atlantic Council experts. (2025.12.5.). Experts react: What Trump's National Security Strategy means for US foreign policy. New Atlanticist. Atlantic Council.
- Fontaine, Richard, Paul Scharre, Katherine L. Kuzminski, Emily Kilcrease, Lisa Curtis, Carrie Cordero, Vivek Chilukuri, Andrea Kendall-Taylor and Jim Townsend. (2025.12.11.) CNAS Insights | The 2025 National Security Strategy.
- Ikenberry, G. J. (2018). Why the liberal world order will survive. *Ethics & International Affairs*, 32(1), 17-29.
- Lissner, Rebecca, Will Freeman, David Sacks, Liana Fix, Steven A. Cook, Michelle Gavin, Paul B. Stares. (2025.12.6.). Unpacking a Trump Twist of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Preble, Christopher, Benjamin N. Gedan, Kelle A. Grieco, Yun Sun, Akriti Kalyankar, Emma Ashford, Evan Cooper, James Kim, Nevada Joan Lee, Dan Grazier, Elias Yousif, Rachel Stohl, Andrew Hyde, Will A. Smith. (2025.12.9.) Experts React: Trump Administratio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Stimson Center.
- US Department of State[USDOS]. (2025.12.11.). Pax Silican Summit Fact Sheet.
- 외교부. (2025.12.13.). 김진아 2차관, 「팍스 실리카 서밋」 참석. 보도자료.

저자 소개

이재원 | jaewonlee@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선임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미중 경쟁, 기술 동맹, 경제제재와 수출통제이다. 주요 논문으로 “미중 경쟁 시기의 동맹 기반 반도체 수출통제.” 『국제지역연구』 33, no.3 (2024), “보장과 통제: 1987년 수출통제 양해각서로 본 한미동맹의 교환 메커니즘.” 『한국과 국제정치』 37, no.3 (2021)이 있다.

‘EU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통신문’ 주요 내용 및 분석

임산호 선임전문관

요약

■ 배경 및 주요 내용

- ▶ 2025년 12월 3일 EU 집행위원회와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통신문’(이하 EU 경제안보 강화 문서)을 발표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2023년 6월 발표된 유럽 경제안보전략(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을 강화·조정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제시
- ▶ 금번 발표된 문서에서는 2023년 경제안보전략의 3대 축(▲촉진 ▲보호 ▲협력)은 유지하면서, 보다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접근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명시
 - 기존 정책도구를 경제안보 관점에서 적극 활용하는 한편, 신규 조치를 보완적으로 도입하고, 산업계와 회원국을 포함한 경제안보 정보 수집·분석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발표
 - EU, 회원국, 산업계가 안보·복원력 강화에 수반되는 경제적 비용을 점진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성을 처음 제기
- ▶ (6대 우선 고위험 영역 선별 및 대응)
 - ① 재화 및 서비스 부문의 전략적 의존성 축소
 - ② EU로의 안전한 외국인 투자 유치
 - ③ 강력한 유럽 방위·우주 산업 및 기타 핵심 산업 부문 촉진
 - ④ 핵심 기술 전반에서 리더십 확보
 - ⑤ 민감한 정보 및 데이터 보호
 - ⑥ 유럽의 핵심 인프라 보호
- ▶ (향후 조치)
 - (상황인식 강화) ▲산업계·회원국 간 정보공유 및 통합을 위해 경제안보정보허브 구축
▲회원국 내 경제안보 보좌관 신설 권고 ▲EU 기업으로 구성된 자문그룹 구성 등 경제안보 정보 수집·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거버넌스를 구축
 - (기존 조치 개선) ▲EU 기금 지원시 경제안보와의 정합성 제고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FDI 심사 가이드라인 강화, ▲이중용도 수출통제 규정 검토, 역외보조금규정(FSR) 적극 활용 등 기존 정책수단의 강화

- (신규 도입) ▲ 공공조달지침을 개정해 특정 전략산업에서 유럽산 우대 기준 제안 ▲ 고위험 부문의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 ▲ 제3국 법률의 역외 적용에 대한 억지력 확보를 위해 차단 규정(Blocking Statute) 검토 등

■ 평가 및 시사점

- ▶ 금번 EU 경제안보 강화 문서는 EU 주요 정책 전반을 경제안보 관점에서 재정렬하고 경제안보 정보분석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안보를 EU 경제정책 전반에 내재화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를 나타냄
- ▶ EU가 보유하고 있는 정책도구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최근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제적인 위협이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구의 구체적인 운용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 한계
- ▶ 2023년 전략의 기본 틀에 따라 협력을 주요 축으로 유지하면서도 EU 역내 기업 우선 기조가 뚜렷해짐에 따라, 우리 기업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EU의 정책 수단을 활용할 여지도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이전 등 요구도 커질 가능성 상존

1. 배경

■ 2025년 12월 3일 EU 집행위원회와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통신문 (이하 EU 경제안보 강화 문서)*을 발표

* 정식 명칭은 'EU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통신문'(Joint Communicat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for Strengthening EU Economic Security, JOIN(2025) 977 final, 2025.12.3.) / 공동 통신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EU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향후 제도화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책 지침의 성격

- ▶ 금번 발표된 EU 경제안보 강화 문서는 2023년 유럽 경제안보전략 발표* 이후 약 2년 만의 업데이트로 기존 전략을 강화·조정하기 위한 목표

* EU 집행위는 2023년 6월 유럽 경제안보 전략을 공동 통신문 형태로 발표하고, 2024년 1월에는 전략 시행을 위한 유럽 경제안보전략 조치계획을 패키지 형태로 발표한 바 있음

- 2023년 경제안보전략의 3대 축(▲촉진 ▲보호 ▲협력)은 유지하면서, 보다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접근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명시

- ▶ 본고는 2025 EU 경제안보 강화 문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2026년 유럽의 경제안보 전략 방향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망

2. EU 경제안보 강화 문서 주요 내용

■ EU가 직면한 경제안보 위험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번 문서에서는 2023년 전략을 보완하여 위험평가에 기반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단 운용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접근을 제안

- ▶ EU의 경제안보 위험은 ▲글로벌 무역에 대한 의도적인 교란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핵심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약탈적 관행 등으로 지속 심화 중
 - 관세 등 파괴적 무역조치와 상호의존을 무기화한 수출 제한으로 인해 글로벌 무역 및 투자 환경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추세
 - 핵심 공급망을 저해하는 불공정·약탈적 관행으로 EU 산업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국가 지원에 기반한 과잉생산 등으로 새로운 의존관계가 심화되는 상황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하이브리드 공격 증가로 전반적인 안보 환경도 지속 악화
- ▶ 금번 문서에서는 2023년 EU가 경제안보 전략을 발표한 이후, 이러한 여건 변화로 인해 EU가 신속하고 단결된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한층 확대되었음을 명시
 - 2023년 전략이 3대 축(촉진·보호·협력)을 중심으로 초기 대응 틀을 제시했다면, 금번 문서는 기존 전략을 보완하여 전략적이고 공세적인 정책도구 활용 방안을 제시
 - 아울러 특정 상황에서는 취약성 감소와 안보 강화를 위해 EU·회원국·산업계가 일정한 경제적 비용을 감수할 준비가 점차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제시하고 있음

■ 금번 문서에서는 4대 경제안보 핵심 목표를 밝히고, 중점 추진 분야로 6개 우선 고위험 영역을 선별하여 향후 목표와 대응 방안을 각각 제시 (부록에서 상세 기술)

▶ 4대 핵심 목표

- ① 정보 수집 및 위협 탐지 역량 강화
- ② 외국의 의존성 무기화 억제
- ③ EU의 '디리스킹(de-risking)' 노력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
- ④ 의존성을 무기화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에 대한 EU의 의존도 축소

▶ 6대 우선 고위험 영역

- ① 전략적 의존성 축소
- ② EU로의 안전한 투자 유치
- ③ 강력한 유럽 방위·우주 산업 및 기타 핵심 산업 부문 촉진
- ④ 핵심 기술 전반에서 리더십 확보
- ⑤ 민감한 정보 및 데이터 보호
- ⑥ 유럽의 핵심 인프라 보호

■ EU는 ▲정보공유·상황인식 강화 ▲기존 정책수단의 전략적 활용 ▲신규 조치를 통한 제도 보완 등 경제안보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 (부록에서 상세 기술)

- ▶ EU는 2023년 전략에서 도입된 위험평가 체계를 중심으로 정보 수집·분석 역량을 고도화하고, 핵심 기술·공급망 전반의 전략적 의존을 신속히 파악하는 한편, 회원국 및 산업계와의 조정과 정보공유를 강화하여 경제안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
 - 집행위원회는 경제안보네트워크(Economic Security Network)를 통해 회원국과 정보 공유 및 조정을 확대하며, 민관의 관련 정보를 통합하기 위한 **경제안보 정보 허브(Economic Security Information Hub)**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 중
 - 회원국 내 **국가 경제안보 보좌관(National Economic Security Adviser)** 지명 권고 및 EU 기업으로 구성된 자문그룹 구성 등 추진 등
 - EU 대표부가 회원국 재외공관, 기타 EU 기관 및 제3국에 위치한 EU 산업계와 연계해 구조화된 협의를 강화함으로써, 경제안보와 관련된 위험 평가·모니터링·완화 과정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추진하며, 기업 간 및 기업-정부 간 교류 촉진
- ▶ 기존 정책 수단을 전략적으로 조정하여 경제안보 위험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정책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
 - ▲EU 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시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우선순위 부여,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정 관련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이중용도 수출통제 규정에 대한 종합 평가 계획, ▲경쟁정책 수단인 역외보조금규정(FSR)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
- ▶ 현 경제안보 전략에 존재하는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수단을 도입할 계획
 - ▲공공조달지침(Public Procurement Directive)을 개정해 특정 전략산업에서 유럽산 우대 기준 제안
▲핵심기술 분야에서 적대적 인수위협에 취약한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EU 스타트업 메커니즘 시범 도입 ▲고위험 부문의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 ▲역외 적용되는 제3국 법률로부터 EU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차단 규정(Blocking Statute) 재검토 등 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신규 조치 도입 계획
 - 핵심원자재 공급망 회복력 확보를 위한 REsourceEU 외에도 반도체법 2.0(CHIPS Act 2.0), 양자법(Quantum Act),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Cloud and AI Development Act) 등 신흥기술부문에서 외국 의존도 줄이기 위한 신규 이니셔티브를 확대

3. 평가 및 시사점

■ 금번 문서에서는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활용하고, 정보 분석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집행위원회의 강력한 의지를 공고화

- ▶ EU는 개방성은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역내 안보와 산업 경쟁력 보호를 핵심으로 삼아, 주요 위협 영역을 식별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배치하는 형태로 경제안보 전략을 재정비
 - 구체적인 위험을 식별하고 이에 대응되는 정책수단을 정교화하는 것은 EU 특유의 경제안보 전략 운영 방식으로 평가
- ▶ 금번 EU 경제안보 강화 문서에서는 회복력있는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EU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책도구를 경제안보 관점에서 재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안보를 EU 경제정책 전반에 내재화하겠다는 집행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
 - 공동 통신문에서는 EU 가입 후보국에도 경제안보 정책 및 제도의 정합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EU 재정·예산 정책 지원의 우선순위로 경제안보와의 연계성을 명시하는 등 EU 내에서 경제안보 정책이 의사결정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임
- ▶ 2023년 경제안보 전략과 비교해 2025년 문서에서는 회원국·산업계와의 정보공유 필요성을 넘어 계획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 회원국들에 경제안보네트워크 강화 및 경제안보 보좌관(National Economic Security Adviser) 지명 권고, 민간 기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설립 계획 등 실질적인 공급망 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함으로써 역내의 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의 개선을 구체적으로 추진
- ▶ 안보와 회복력을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수반되는 경제적 비용에 대해 EU, 회원국, 산업계 모두가 감수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
 - 공급망 다변화와 고위험 공급자 배제 등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 비용 상승 및 효율성 저하가 불가피한데, 본 문서에서는 경제안보를 위해 기업들이 이를 수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처음 제시하면서 경제안보를 민관이 함께 관리해야 하는 체계로 확대

■ EU 역내 산업을 우선하는 기조는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EU가 보유한 정책 도구의 구체적인 운용 방안이나 최근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제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한계

- ▶ 2023년 경제안보 전략에서는 3대 핵심축 중 하나로 파트너십을 꼽고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는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중시했으나, 2025년 경제안보 강화 문서에서는 이를 유지하면서도 EU 역내 기업 우선 기조가 더욱 뚜렷해진 특징
 - 문서에서는 EU 공공조달지침 개정을 통해 특정 전략산업에서 유럽 우대 기준 제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

- 특정 영역에서는 FDI 심사 매커니즘에서 포함하지 않는 주식·채권 등 형태인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해서도 검토를 예고하고 있어, 자금 흐름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경계 확대가 예상
- ▶ 한편, 최근 유럽의 경제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관련해 단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조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한계
- 여러 조치를 열거하고 있음에도 최근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발동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반강압조치(ACI) 등의 실질적인 운용 방안, 그린란드 등 EU의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분석, EU의 높은 디지털 서비스 의존도와 연계된 정책 도구 활용과 같이 당장 직면한 실제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구체 계획이 부재

■ EU가 특정 공급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회요인은 존재하나, EU의 경제안보 환경이 역내 안보와 산업 증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명확해짐에 따라 우리 기업에 요구하는 준수 조건도 엄격해질 전망

- ▶ 역내 기업의 이익이나 경쟁력과 충돌할 경우, 우리 기업에 대해서도 역외보조금규정(FSR) 등을 활용한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며, 배터리, 반도체 등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서 기술 이전이나 정보 제공과 관련한 조건이 까다로워질 가능성
- ▶ 역내 투자 시에도 투자국 출신 인력 위주의 고용이나 단순 조립 위주의 투자에 대해 경계하고, 부가가치가 있는 투자를 요구하는 등 우리 진출 기업들의 준수 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평가
- ▶ 이에 따라 EU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도 EU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역내 기업과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경쟁 관계인 부분에서는 우리 정부와 EU 차원의 정책 조율이 필요해질 것으로 판단

부록 1

경제안보 지원을 위한 EU 정책도구 목록

※ 부록에서는 통신문 내 2장을 비공식 번역 및 요약하여 제공

- ▶ 통신문에서는 EU가 보유한 정책 도구들을 더욱 전략적, 효율적, 선제적으로 사용해 경제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책 도구들을 예시적으로 소개

경제안보 지원을 위한 정책도구 목록

분류	정책도구 목록
무역·경쟁	상계관세 조치(보조금 상계 조치)
	반덤핑 조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역외보조금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기타 경쟁정책 수단
	관세 절차 및 통관 통제
	무역협정
복원력·사이버안보	표준 기반 무역
	내부시장 긴급대응 및 복원력 법 (Internal Market Emergency and Resilience Act)
	수출에 관한 공통 규칙 규정
	비축 전략
	핵심 기반시설 회복력 지침 (Resilience of Critical Entities Directive)
	사이버 복원력 법 (Cyber Resilience Act)
	NIS2 지침 (NIS2 Directive)
안보·공공질서	5G 툴박스
	사이버보안법 (Cyber Security Act, 개정)
	사이버 연대법 (Cyber Solidarity Act)
	공공조달 지침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외국인직접투자(FDI) 심사 규정 (FDI Screening Regulation)
	이중용도 수출통제 규정 (Regulation on Dual Use Export Controls)
	해외투자 모니터링 권고 (Recommendation on outbound investment monitoring)
	연구보안에 관한 이사회 권고 (Council Recommendation on Research Security)

분류	정책도구 목록
반강압· 제한 조치	반강압조치 (ACI, Anti-Coercion Instrument) 규정
	제재 / 제한조치 (Sanctions / restrictive measures)
	차단 규정(블로킹 규정) (Blocking Statute Regulation)
자금조달· 자금제약	글로벌 게이트웨이 (Global Gateway)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디지털유럽프로그램(Digital Europe Programme), 커넥팅유럽퍼실리티(Connecting Europe Facility) 내 EU 자금 지원 제한
	경제안보 관련 제한조치
	고위험 공급업체 관련 제한조치
	경쟁력 조정 수단 (Competitiveness Coordination Tool)
분야별 이니셔티브	재정규정 제136조 (Article 136 of the Financial Regulation)
	리소스 EU (RESouceEU)
	EU 반도체법 2.0 (CHIPS Act 2.0)
	양자 전략 (Quantum Strategy)
	산업 가속화 법 (Industrial Accelerator Act)
	데이터 유니언 전략 (Data Union Strategy)
	핵심원자재법 / 핵심원자재센터 (CRM Act / CRM Centre)
	EU 스타트업·스케일업 전략 (EU startup scaleup strategy)
	유럽 혁신법 (European Innovation Act)
	EU 항만 전략 (EU Port Strategy)
	드론 전략 2.0 (Drone Strategy 2.0)

부록 2

6대 경제안보 우선 고위험 영역 및 중점 추진 내용

※ 부록에서는 통신문 내 3장을 비공식 번역 및 요약하여 제공

① 핵심 재화·서비스 분야의 공급망 복원력 강화 및 고위험 의존성 대응

▶ 위험 인식

- EU는 전 세계 파트너로부터 투입재·중간재·필수 서비스에 광범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공급은 EU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지 않는 소수 국가에 집중된 상황
- 이러한 위험은 핵심 원자재, 가공·첨단 소재, 청정기술 부품, 범용 반도체에서 특히 두드러지며, 금융·의약품·항공우주·디지털·우주기술·농식품 분야 전반에서도 확인
- 고위험 의존성은 아래와 같은 중대한 영향을 초래 가능
 - 강압 수단으로의 무기화 : (예) 핵심 원자재, 범용 반도체, 첨단 소재, 에너지 제품, 특정 서비스 중단 위협
 - 위기 시 체계적 경제 취약성 및 공공질서·공중보건 리스크 : (예) 개인보호장비, 필수 의약품, 식량
 - 통신·디지털 인프라 교란 등 범부문적 혼란 : (예) 통신망 침투, 단일 클라우드 제공자 의존, 디지털 서비스 킬 스위치
 - 경쟁력 약화 및 녹색·디지털 전환 지연 : (예) 배터리, 영구자석, 청정기술 제품·부품, 첨단 소재
 - 회원국의 군사 역량 자율성 저해
 - EU 식량 주권 위협

▶ 목표

-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단기적 공급 중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단일시장 내 고위험 의존성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새로운 의존성 형성을 차단
- 이를 위해 ▲공급망 모니터링 강화 ▲공급 다변화 지원 제도 구축 ▲단일시장 내 경쟁 왜곡 시정을 추진

▶ 주요 조치

- 대체 공급망이 덤팡·가격 조작으로 약화되지 않도록 대응 조치 시행
- 회원국의 기준 정책 수단 이행을 지원하되, 특히 「탄소중립산업법」에 따른 복원력 기준 (2026.1월 적용)의 공공조달·경매·공공지원 제도 반영을 중점 지원
- EU 역내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공급 다변화 추진
- EU의 무역협정 네트워크 및 양자·다자 협력을 기반으로, 후보국 및 중동·북아프리카 (MENA) 등 파트너 국가에서 핵심 제품 생산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제고하고 EU 기업의 신규 사업 기회 창출을 도모
- 위험 평가와 회원국·산업계 협력을 통해 공급망 취약성과 고위험 의존성을 지속적으로 식별·모니터링

적용 사례: 범용 반도체 (Mainstream Semiconductors)

▶ 위험

- 필수적이지만 마진이 낮은 범용 반도체의 생산을 단일 제3국 공급자에 구조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은 여러 유럽 산업에 위험을 초래 중

▶ 정책 수단의 활용

- 집행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EU 역내 생산 확대를 촉진할 것
- 「반도체법(Chips Act)」 개정을 통해 효과적인 위험 완화 조치가 제시될 예정
- 안보 관련 용도로 사용되는 수입 범용 반도체의 사이버보안 위험은 「사이버 복원력법 (Cyber Resilience Act)」에 따라 추가 평가될 필요

② 부가가치형 외국인직접투자(inbound investment) 유치

▶ 위험 인식

- 외국인 유입 투자는 일자리 창출, 산업 역량 강화, 자금 조달, 규모의 경제 활용, 혁신 및 기술 이전을 통해 EU의 회복탄력성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지만, 일부 외국인 유입 투자는 EU 경제안보에 위험으로 작용 가능
 - 안보 및 공공질서 관련 위험 : (예) ▲ 민감 데이터 접근 가능성(위치정보, 생체인식 데이터, 영업비밀 등)
▲ 핵심 인프라 접근 위험 ▲ 이중용도 및 기타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 위험
 - 경제적 회복탄력성 관련 위험 : (예) ▲ 고위험 주체 또는 제3국이 통제하는 핵심 공급망에 대한 의존성 심화 ▲ 단일 실패 지점 형성 가능성(single point of failure) ॥ 경제적 교란 또는 경제적 수단의 무기화에 대한 취약성 증대(배터리, 핵심원자재(CRM), 소프트웨어, 부품 등)
 - 경쟁력 저하 관련 위험 : (예) ▲ 기술 이전 부족 ▲ 단순 조립공정에 국한되면서 부가가치 창출의 제한
▲ 투자국 출신 인력 중심 고용으로 인한 지역 노동시장 부정적 영향

▶ 목표 및 주요 조치

- 외국인 투자에 대해 개방적이고 매력적인 EU 투자 환경 유지
- 경제안보 차원에서 의존성 심화 또는 신규 의존성 형성 방지와의 균형 추구
- EU 기업의 혁신 역량 유지·강화 필요
 - 신흥 유망 기업의 핵심 지식재산권(IP) 보호
 - 혁신 역량, 공급 안정성, 서비스 연속성 확보
- 정책 수단과 이니셔티브를 활용한 표적화된 조치 설계·이행
 - 경제안보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국가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건부 외국인 투자 적용
 - 기술 이전을 유도하는 투자 조건 설정

적용 사례: 배터리 전기차(BEVs)

▶ 위험

- 일부 BEV 공급자의 지배적 시장 지위로 인한 시장 왜곡 가능성
- BEV 생산 핵심 기술에 대한 엄격한 통제로 EU 자동차 산업의 전략적 역할 약화 위험
- 커넥티드 차량과 관련된 내재적 사이버보안 위험 존재

▶ 정책 수단의 활용

- 무역 및 경쟁정책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정책 수단을 통해 부가가치형 투자 유도
- 무역 흐름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 연결성 요소에 대한 디리스킹 추진
- 차세대 BEV 기술 투자 지원을 통한 EU 회복탄력성과 경쟁력 유지
- 필요시 BEV 관련 커넥티드 부품에서 고위험 주체에 대한 노출 제한
- EU 경제안보 목표에 부합하는 기술 및 관련 노하우의 공유 촉진

③ 방위·우주 산업 기반 및 기타 고위험 산업 부문의 역동성 지원

▶ 위험 인식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정학적 긴장 고조, 무역 의존의 무기화로 인해 방위·우주 산업을 중심으로 한 역내 산업 기반 투자 중요성 확대
- 방위·우주 산업은 EU 경제 기반과 전략적 자율성의 핵심 요소이며, 물류 등 전략적 이중용도 산업을 포함
- 주요 위험 요소는 아래와 같음 :
 - 역내 투자 부족
 - 낮은 생산 규모와 공공 인프라에서의 역내 기술 조달 미흡
 - 제3국의 비시장적 정책·관행에 따른 글로벌 및 역내 시장 왜곡
 - 제3국의 부당하거나 과도한 수출통제 적용(제3국 수출통제 체제의 역외 적용)
 - 외국인 인수(일부 경우 포트폴리오 투자 포함)로 인한 소유권 및 통제 상실
 - 경직된 규제와 분절된 자본시장으로 인해 이중용도 고위험·고수익 기술의 상업화 및 스케일업 저해
 - 방위 등 핵심 부문에서 일부 핵심 부품을 고위험 주체로부터 조달
 - 지정학적 긴장 시 방위 장비, 이중용도 기술, 군사 이동성 자산의 접근 및 사용 제한 가능성
 - 고속력 인력 유지 및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혁신 속도 저하 위험

▶ 목표 및 주요 조치

- EU 내 전략적 제조 역량과 능력 유지·강화 및 역내 핵심 기술·부품·소재 개발 지원
- 공동 구매, 공동 수요 확보 등 수요 측면 지원 강화
- 전략적 역량 및 산업의 역외 이전 방지
- 공공·제도 인프라에서의 역내 조달 촉진
- 방위 및 핵심 공급망에서 잠재적 적대 행위자의 단계적 배제(EU 역외 조달 대상 핵심 방위·우주 기술의 조달 제한 포함)
- 핵심 제품·기술 공급 기업에 대한 FDI로 인한 위협 완화
- EU 스타트업 및 기업의 스케일업 여건 조성(▲금융 접근성 확대 ▲특정 투입재에 대한 한시적 우대 관세 ▲우호적인 자본시장 생태계 구축 등)
- 적용 범위 및 모니터링
 - 우선순위는 방위 및 우주 산업 기반 지원에 설정
 - 단기적으로는 위험 평가에서 식별된 구체적 고위험 상황에 집중
 - 경제안보 관점에서 다음 산업을 지속 모니터링 : ▲청정기술 ▲에너지 및 에너지 집약·순환 산업
▲농식품 ▲디지털·전자 ▲항공(항공우주 포함) ▲조선 ▲자동차 ▲보건

적용 사례: 드론 및 드론 대응 시스템의 핵심 부품

▶ 위험

- 드론, 배터리 및 드론 대응 시스템의 핵심 부품을 제3국 공급자에 의존
- 실전 전장 경험에 기반한 짧은 혁신 주기로 인해 신속한 기술 간이 요구됨

▶ 정책 수단의 활용

- 집행위는 유럽 방위산업 프로그램 하의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EU 역내 생산 역량을 확보하고, 실제 작전 경험에 기반한 드론 기술의 혁신 주기 단축을 추진
- 유럽 방위산업 프로그램의 제도·사업 내에서 관련 기관간 협력 및 정보 교환 지속 강화
- 공급망 회복탄력성 확보를 위해 이중용도 품목을 포함한 특정 제품·장비별 공급망 정밀 맵핑을 실시하고 공동 투자를 통해 생산 지원

④ 핵심 기술 전반에서의 선도적 지위 개발 및 유지

▶ 위험 인식

- 일부 제3국과 기업은 EU의 신흥·첨단 기술 및 노하우에 대한 통제권 확보를 시도하고 있으며, 해당 시도는 기업 인수, 연구개발 협력, 리버스 엔지니어링, 산업 스파이 활동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실행

- 또한, 혁신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잠식함으로써, 첨단 R&D에 재투자할 수 있는 수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방식도 발견
- 장기적으로 EU의 경제 성과·안보·지정학적 위상은 기술 역량의 유지·강화 여부에 좌우될 것이며, EU 기금을 바탕으로 한 지원 수단 강화, 기술 안보 및 기술 유출 대응을 통해 핵심 기술 전반의 역량을 보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
- 동시에 이중용도 수출통제의 이행과 집행이 분절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관리 필요

▶ 목표 및 주요 조치

- EU 내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우호적인 제도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왜곡을 시정함으로써 EU의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할 것
- 단일시장 산업 기반 내에서 연구·개발·혁신 성과의 산업적 적용과 가치 창출을 촉진하는 데 중점
- EU 경제안보 목표 달성을 필수적인 신뢰 가능한 국제 연구·혁신 파트너십은 지속적으로 촉진하지만, 약탈적 인수, R&D 협력, 민감한 목적지·부문 투자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노하우 유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 조치를 추진할 것
- EU 내 기업과 연구·혁신 기관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금 부족으로 인한 인수·소유권 이전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동시에 EU 지원 핵심 기술 조치에 대한 고위험 주체의 접근을 차단하여, 해당 기술의 대EU 무기화 가능성을 예방할 것

적용 사례: 양자

▶ 위험

- 외국 정부 지원 또는 고위험 주체가 투자·인수·R&D 파트너십을 통해 EU의 양자 컴퓨팅·통신·센싱 분야 노하우와 인프라에 접근 시도
- 민감한 군사·정보 분야 활용이 역외에서 가속화되고, EU의 기술 주권이 약화될 위험 존재

▶ 정책 수단의 활용

- 집행위원회는 EU 내 핵심 양자 주체·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맵핑하고, 외국인 투자·파트너십·지식재산(IP) 흐름을 추적하여 FDI 스크리닝, 수출통제, 연구안보 위험 평가에 활용
- 위험을 초래하는 투자에 대해 조사 권한을 활용하고, 적대적 인수 시도 또는 기술 유출 사례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회원국과의 조정 체계 강화
- 경제안보 목표 달성을 위해 EU 및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의 자금과 공급자를 핵심 양자 부품·서비스에서 우선 활용하고, 민감 부문에서 고위험 양자·클라우드 공급자 의존을 제한
- 과도한 외국 영향력 하에 있는 주체가 민감한 양자 프로젝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추가 조치

⑤ 민감 정보·데이터 접근 방지

▶ 위험

- 제3국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EU 또는 회원국의 민감 정보·데이터에 접근 가능
 - 산업 스파이 활동
 - 특정 제품에 사용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공급 (커넥티드 차량, 5G 및 기타 통신 시스템, 전력망 인프라, DNA 시퀀싱 플랫폼 등)
 - 민감 정보·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지배력 확보
- 접근 대상이 될 수 있는 민감 정보·데이터
 - 항만·공항·교통 운영자
 - 금융 네트워크
 - AI 모델 및 데이터 포털
 - 통신 시스템
 - 개인정보 또는 민감한 시장 정보
- 이러한 접근은 공급망 문제와 결합되거나, 핵심 에너지 인프라, 데이터 모니터링·처리 관련 첨단 기술을 보유한 EU 기업의 인수합병 등과 합쳐질 때 위험이 확대될 수 있음

▶ 목표 및 주요 조치

- EU 및 회원국의 민감한 정보·데이터에 대해 고위험 개체 및 관련 개체의 접근 위험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경우 이를 제거
- 관련 절차에 따라, 전략적 부문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과학·기술·공학·수학 (STEM) 분야를 포함한 고등교육 기관의 외국인 학생이 잠재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주의

적용 사례: EU 국경(항만·공항·육상 국경 등)의 탐지 장비

▶ 위험

- EU 전반에 공통된 운영 관행 부재하며, 단일 또는 소수 공급자에 대한 의존
- 유지보수 등 허가된 경로를 포함한 비인가 접근으로 탐지 장비 성능 저하, 관련 민감 정보의 무결성·기밀성 훼손
- 장비를 매개로 한 악성코드 취약성으로 정보·시스템·네트워크의 침해 또는 왜곡 위험

▶ 정책 수단의 활용

- EU의 네트워크·정보보안 지침인 NIS2에 따른 사이버보안 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고위험 공급자 식별 ▲사이버보안 인증 제도 활용 ▲사이버보안 표준 강화 ▲조달 입찰 공고에 보안 요건 내재화를 통한 위험 완화 추진
- 특정 공급자에 경쟁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외국 보조금의 역할을 평가

⑥ 핵심 인프라의 교란 예방 및 완화

▶ 위험 인식

- EU 핵심 인프라가 외국 행위자에 의해 교란될 경우 유럽 경제 전반에 연쇄적 영향 가능하며, 핵심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중대한 과제로 부각
 - 주요 교통, 우주 시스템, 에너지·통신 인프라
 - 군사 이동성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인프라
- 핵심 인프라의 교란은 물리적, 사이버, 하이브리드 공격이나 시설 전체 또는 일부·하위 구성요소에 대한 사보타주와 같은 방식으로 발생 가능하며, 핵심 인프라에 필수적인 구성요소·서비스를 뒷받침하는 ICT 공급망과 연계되어 교란 발생 가능
- 고위험 제3국 및 사업자가 향후 교란을 목적으로 EU 핵심 인프라에 사전 배치할 위험 존재
- 제3국이 국제 표준 설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경우 해당 표준이 EU 핵심 인프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

▶ 목표 및 주요 조치

- 방위·역내 안보·대비 관련 EU 전략과의 정합성 유지
- 기존 규칙 집행을 통해 데이터 유출, 스파이 활동, 물리적·사이버 교란 위험 축소
- 구체적 목표
 - 고위험 주체에 의한 EU 핵심 인프라의 소유·지배·운영 제한
 - 핵심 인프라의 물리적 보호 조치 강화 및 사이버 취약성 축소
 - 단일 공급자 또는 고위험 공급자에 대한 의존성 축소
 - 공급자 의존 구조에서 은폐된 취약성, 백도어, ICT 체계적 공급 중단 위험 최소화
 - 글로벌 공급망 교란 또는 보건 위기 발생 시 EU 내 확장 가능한 핵심 제조 역량 확보
 - EU 지원 사업에 대한 고위험 주체의 접근 차단
 - EU 및 신뢰 가능한 제3국 내에서 핵심 하위 구성요소의 신뢰 가능한 공급자 육성 및 실질적 대안 확보

적용 사례: 태양광 인버터

▶ 위험

- 단일 공급자에 대한 의존성 확대
- 사이버 위험: 전력 생산 파라미터 조작, 전력 생산 차단, 운영 데이터 접근, 공급망 참여자 침투 등

▶ 정책 수단의 활용

- 집행위는 NIS2 지침의 틀 하에서 사이버 위험 평가를 지속 수행할 계획이며(2026년 완료 예정), 이를 바탕으로 식별된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완화 조치*를 병행 추진할 계획
 - *사이버 복원력법(Cyber Resilience Act)에 따른 인증·표준화, 탄소중립산업법의 비가격 기준 적용
- 태양광 에너지 시장에서 외국 보조금의 역할을 지속 평가할 계획

부록 3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향후 추진 계획

※ 부록에서는 통신문 내 4장을 비공식 번역 및 요약하여 제공

■ EU 대표부를 중심으로 회원국 및 산업계와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EU 경제 안보 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 강화를 추진

▶ 산업계로부터의 정보 요구 및 수집 확대

- 핵심 공급망·핵심 인프라·핵심 기술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신속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증거 제출 요청(calls for evidence)을 통해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공급망 취약성과 외부 압박 노출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 회원국 간 조정·정보 교환 강화(Economic Security Network)

- 위험 평가, 핵심·고위험 주체, 우려 거래 등에 대해 신속하고 안전한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 시스템 구축
- 회원국 권한 범위 내 정책 수단의 활용을 집중 지원하고, 위기 시 필수재 공급을 담당하는 EU 비축 네트워크(EU stockpiling network)와 상호 연계 강화

▶ 경제안보 정보 허브(Economic Security Information Hub) 구축

- 공공·민간 기관 기준 메커니즘에 산재된 정보를 통합·정리하고, 추가적인 경제안보 정보 수집
- 고위험 분야 및 다변화 대상 분야의 시장·무역 흐름을 신속히 파악하고, 고위험 주체 정보를 통합해 EU 재정 지원·투자·조달 참여 시 적격성 평가를 지원
- 유럽 관세청(ECA) 및 EU 관세 데이터 허브를 활용해 관련 정책의 이행·집행과 정보 교환의 효율성 제고

▶ EU 대표부를 주축으로 대외 협력 강화

- 회원국 공관, EU 기관, 제3국 내 EU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위험 평가·모니터링·완화 과정에서의 협력 강화
- 기업 간 및 기업-정부 간 교류 확대를 통한 현장 기반 정보 수집 및 대응 역량 제고

▶ 회원국 내 국가 경제안보 보좌관(National Economic Security Adviser) 지정 권고

- 범정부 차원의 경제안보 위험 평가·완화 조정을 담당하는 책임자로 지정하고, 정례 회의를 통해 정책 조정과 공동 행동을 촉진
- EU 이사회에 정례 논의 체계 검토 요청

▶ EU 기업 대표로 구성된 자문그룹 구성

- 구체적 위험 요인, 대응 방안 및 디리스킹 전략에 대한 자문 제공
- 산업계의 부문별 논의 참여 확대 및 필요 시 집행위원 대상 브리핑 실시

- ▶ 무역 회복탄력성 정보 포털(Trade Resilience Information Portal) 구축
 - 제3국의 수출 제한·통제 조치와 EU 회복탄력성 구축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기업에 제공
- ▶ 핵심 기술 관측소(Observatory on Critical Technologies) 확대
 - 방위·우주 산업 및 관련 공급망에 대한 식별·모니터링·분석 강화
 - 신흥 기술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EU 및 회원국 차원의 기술 로드맵 이행을 지원
- ▶ 연구안보 전문센터(Centre of Expertise on Research Security) 활용
 - 연구안보 강화 및 연구 커뮤니티의 회복력 제고
 - 대학의 국제 파트너 선정 지원을 위한 실사(due diligence) 플랫폼 개발

■ EU 기금을 활용한 재정지원 시 경제안보 관련 프로젝트를 우선하거나, FDI 심사,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등 기존 조치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정책 수단의 활용도 개선

- ▶ EU 기금 운용 시 경제안보 관점 강화
 - EU 기금 지원 과정에서 EU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유인하고, 우주·방위 등 전략 부문에서 핵심 기술·부품·소재에 대한 의존성 축소를 위한 충분한 재원이 동원되도록 관리
 - EU 경제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제3국 출신 주체의 전략 부문·핵심 기술·인프라 분야 EU 기금 접근을 제한
 - EU 프로그램과 경제안보 목표 간 정책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2026년 1분기 중 마련 예정
- ▶ 기존 정책 수단의 정비 및 보완
 - 외국인직접투자(FDI) 스크리닝 규정의 이행 경험을 토대로, 회원국 간 일관된 심사 기준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 이중용도 수출통제 규정에 대한 전면 평가를 실시하는 등 기존 정책 수단의 공백을 보완할 계획
- ▶ 불공정 경쟁 대응 및 EU 기업 경쟁력 제고
 -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적극 활용하고, 자율 관세 할당량 등 전략적 관세 수단의 활용을 재검토함으로써 불공정 경쟁에 대응하고 EU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

■ 기존 정책 수단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개발·검토 중인 신규 조치

- ▶ EU 차원의 스타트업 모니터링 메커니즘(시범) 검토
 - 핵심 기술 분야에서 적대적 외국 인수 위험에 노출된 스타트업을 식별하고, EU 투자 대안 및 지원(자문, 역량 강화, 투자자 매칭 등)으로 연계

▶ 포트폴리오 투자 모니터링

- 외국인직접투자(FDI) 조정 메커니즘 적용 범위 밖의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해, 경제안보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감독 당국과 협력해 모니터링 강화

▶ 산업 가속화법을 통한 산업 기반·공급망 회복력 강화

▶ 핵심 원자재 2차 시장 확대(ResourceEU)

- 순환경제법(Circular Economy Act) 등을 통해 핵심 원자재(CRM) 2차 시장을 확대하고, 경제안보 고위험 분야의 전략적 CRM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을 용이화

▶ 차단 규정(Blocking Statute) 재검토

- 제3국 제재의 역외 적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적용 절차를 단순화하고 EU 개인·기업의 준수 비용을 축소함으로써 EU 내 사업자 보호와 예측 가능한 프레임워크 구축

▶ 고위험 부문 공급 다변화 유도

- 특정 고위험 부문에서 최소 2개 이상 공급원 확보를 장려하고 단일 지배적 공급자에 대한 노출 제한 방안 검토

▶ FDI 스크리닝 대상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가능성 검토

- 투자 부재 시 재무적 존속 가능성이 위태로운 경우를 대상으로 국가보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 지원 여지 검토

▶ 공공조달 지침 개정 시 유럽 우선 기준 제안

- 특정 전략 부문에서 유럽 산업 리더십을 촉진하기 위해 회복탄력성 강화 및 안보 리스크 완화를 목표로 한 기준 도입

▶ 사이버보안법 개정을 통한 접근 제한

- 고위험 공급자의 핵심 인프라 접근을 EU 차원에서 제한하는 조치 도입

▶ 반도체법(Chips Act 2.0), 양자법(Quantum Act), 클라우드 및 AI법(Cloud and AI Development Act) 등 신규 이니셔티브를 통해 통해 신흥 기술 분야에서 외국 의존도 축소를 추진할 계획

참고문헌

- EU 집행위, Joint Communicat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for Strengthening EU Economic Security, 2025.12.3.
- _____, Factsheet, Strengthening EU Economic Security, 2025.12.3.
- _____, Press corner, Strengthening EU Economic Security, 2025.12.3.

저자 소개

임산호 | shlim22@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선임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국제경제, 국제금융, 산업 공급망, 에너지이다. 주요 논문으로 “Optimal bond holding dynamics with hedging against real exchange rate risks”,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 Finance (2023),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가 한국의 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에 미친 영향 분석” 『무역학회지』 제49권 제5호 (2024), “The Effects of Risk-hedging Motives and Trade Costs on Foreign Bond Holdings”,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2025)가 있다

미국 국방수권법과 경제안보: 투자, 바이오, 조선, 공급망

최용호 전문관

요약

■ 배경

- ▶ 최종 입법화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경제안보 관련 내용 다수 포함
⇒ 경제안보 정책 방향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 합의를 보여주는바, 분석 필요

■ 국방수권법의 경제안보 관련 주요 내용

- ▶ (투자) 중국 등 우려국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의 outbound 투자규제 법제화
 - (제재) 해외투자 관련 대통령에게 외국인을 제재할 권한 부여
 - (금지) 재무부에 특정 대상 outbound 투자를 금지할 권한 부여
 - (신고) 신고 대상(금지 대상 외) outbound 투자에 대한 사후 신고 의무 규정
- ▶ (바이오) 바이오 산업 육성 및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규제) 美 연방정부와 우려 바이오 기업 간 계약 및 자금 지원 금지
- ▶ (조선·해운) 조선 자동화 촉진 등을 통해 美 조선·해운 산업 기반 강화 도모
- ▶ (공급망) ▲ 방산 기술 및 제조 역량 강화 ▲ 전략 품목 공급망 의존성 완화

■ 평가 및 전망

- ▶ (총평)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경제안보 정책은 ▲ 對中 경제 강화 ▲ 美 취약성 완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입법화되었으며, 미국 내 초당적 합의를 반영
 - 다만, 법률의 명문에 구애받지 않고 대통령 권한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고려 시 정책의 구체적 이행 수준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
- ▶ (투자) 해외투자심사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다만, 행정부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정책적 유연성 확보
 - 상황적 필요에 따라 협상·거래 관점에서 對中 경제 수위를 조절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 고려 시, outbound 투자규제 수준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
- ▶ (바이오) 바이오 규제가 시행되면 中 기업에 의존하던 제약사들이 다른 기업으로 거래처를 전환하는 등 의약품 공급망 및 기업 간 경쟁 구도 변화 전망
- ▶ (조선·해운) 조선·해운 분야 부흥을 위한 미국의 의지 재확인 / 외국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입법 未 포함

1. 배경

■ 美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하, 국방수권법) 최종 입법화^{**}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6

** 하원 통과('25.12.10. / 찬성 312, 반대 112) → 상원 통과(12.17. / 찬성 77, 반대 20) → 트럼프 대통령 서명(12.18.)

- ▶ 국방수권법에 ▲outbound 투자규제^{*} ▲바이오 안보 강화 ▲조선·해운 지원 ▲전략 품목 공급망 강화 등 경제안보 관련 내용 다수 포함

* 미국 기준, 미국으로 유입되는 투자에 대한 규제를 inbound 투자규제 또는 외국인투자심사라고 하며, 미국 외부로 유출되는 투자에 대한 규제를 outbound 투자규제 또는 해외투자심사로 지칭

- 이번에 입법화된 국방수권법에는 현재 미국 내 초당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경제안보 정책의 방향 ▲대통령 권한 행사 범위 등이 반영, 분석 필요

2.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의 경제안보 관련 주요 내용

■ outbound 투자규제

※ Comprehensive Outbound Investment National Security Act of 2025 (COINS Act)

- ▶ (개요) 중국 등 우려국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의 outbound 투자규제 / 기존 행정명령 등^{*}을 통해 규정했던 내용을 강화하고 법률로 입법화하여 제도화

*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분야 관련, 우려국(중국, 홍콩, 마카오)에 대한 미국인의 outbound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 既 발표('23.8.9.) / 이 행정명령에 따라 美 재무부는 규제 대상 주체, 기술 등을 구체화한 시행규칙 마련('25.1.2.)

- ▶ (대통령의 제재 권한) 미국인이 대상 외국인의 주식·채권을 대규모로 취득하거나 이에 투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대상 외국인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may impose) 보유

- (미국인) ▲美 국적자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 ▲미국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미국 관할권 내에 있는 기관(그러한 기관의 해외 지사도 포함)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any person in the United States)

- (제재 대상 외국인)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에서 설립된 기관 ▲중국 정부 또는 정부의 지시·통제를 받는 기관 ▲중국공산당 중앙위 구성원 ▲상기 정부·기관 등이 5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기관 ▲중국의 국방, 군수물자 부문, 감시기술 부문 등에 대한 중요한 활동을 인지^{*}하고도 수행한 기관

* 인지(knowingly): 해당 사실·상황·결과에 대한 실제 인식이 있거나 알았어야 하는 사정(should have known)이 있는 경우

- ▶ (투자 금지) 재무부는 우려국 외국인의 금지 대상 기술 분야와 관련된 국가안보상 중요한 투자거래에 미국인이 인지하고도(knowingly) 참여하는 것을 금지할 권한(may) 보유
 - (우려국 외국인) ▲ 우려국에서 설립된 기관 ▲ 우려국 정부 또는 정부의 지시·통제를 받는 기관 ▲ 중국공산당 중앙위 구성원 ▲ 상기 정부·기관 등이 5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기관 등
 - ※ 우려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6개국
 - (금지 대상 기술) ▲ 첨단반도체 기술 및 마이크로 전자 ▲ 인공지능 시스템 ▲ 양자 정보 기술 ▲ 고성능 컴퓨팅 및 슈퍼컴퓨팅 ▲ 극초음속 시스템 / 5개 분야 내 구체적 금지 대상은 재무부가 시행규칙으로 규정
 - (규제 대상 거래) 우려국 외국인 기술 관련 미국인의 직·간접적 ▲ 지분취득 ▲ 지배권 확보 ▲ 합작투자 전환 ▲ 현지 사업 기반 구축 등 outbound 투자
 - (미국인) ▲ 美 국적자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 ▲ 미국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미국 관할권 내에 있는 기관(그러한 기관의 해외 지사도 포함) ▲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
 - (인지 기준) ▲ 상황·사실의 존재 또는 발생할 것이 확실함을 실질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 상황·사실의 존재 또는 향후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는 경우 ▲ 상황·사실의 존재에 대해 인식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예외) 대통령이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거래의 경우, 상기 금지로부터 면제 가능 / 예외 부여 시 5일 내 美 의회 통보 의무
- ▶ (신고 의무) 우려국 외국인의 신고 대상 기술 분야와 관련된 국가안보상 중요한 투자거래에 미국인이 인지하고도(knowingly) 참여하는 경우, 해당 거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무부 신고(notification) 의무
 - 재무부는 국방수권법 발효 450일 이내에 이러한 의무를 규율할 시행규칙 마련 의무
 - (신고 대상 기술) 5개 기술 분야에서 '금지 대상 기술'에 포함되지 않는(보다 낮은 수준의) 기술 / 구체적 신고 대상은 재무부가 시행규칙으로 규정
 - 우려국 외국인, 규제 대상 거래, 미국인, 인지 등에 대한 기준은 상기 '투자 금지' 규정과 동일
- ▶ (다자협력) 재무부는 상무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미국의 동맹·우방국 대상 아래의 사항 추진
 - 본 법의 투자 금지 및 신고 의무화의 효과적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양자·다자 협의 및 관련 절차 조율
 - 동맹·우방국과 협력하여 상기 활동 관련 동향 등을 포함한 정보 공유 메커니즘 구축
 - 동맹·우방국 정부가 우려국의 금지 기술 개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한 투자규제 체제를 자국 차원에서 도입하도록 협력·권장(work with and encourage)

■ 바이오 규제 및 지원

※ Prohibition on Contracting with Certain Biotechnology Providers (SEC. 851.)

- ▶ (개요) ▲ 바이오 육성 ▲ 바이오 규제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 (바이오 육성) 바이오 기술·산업을 방위 산업 및 안보 역량의 핵심으로 인식, 국방 핵심 전략기술로 명시하여 지원
 - 바이오 기술·산업 촉진을 전담하는 조직을 국방부 내 설치하여 ▲ 국방 바이오기술 전략 수립
 - ▲ 바이오 제조 및 상업화 지원 ▲ 바이오 공급망 강화 ▲ 인공지능 등에 활용하기 위한 바이오 데이터 관리 등 실시
- ▶ (바이오 규제) 연방정부가 우려 바이오 기업이 제공하는 바이오 기술 장비·서비스를 직접 조달하거나 이를 획득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활용^{*}하는 것을 금지
 - * 연방자금을 지원받는 제3자가 우려 바이오 기업의 장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연방계약에서 배제
 - (우려 바이오 기업) ▲ 美 관리예산실(OMB)이 발표하는 목록에 포함된 기업^{*} ▲ 美 국방부가 2021년 국방수권법에 따라 공표하는 미국 내 활동 중국 군사 기업 ▲ 상기 기업의 자회사·모회사·승계회사
 - * OMB 지정 기업의 경우는 업계 혼란 최소화를 위해 지정된 날로부터 5년간 효력 발생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금지 규정 未 적용
 - (예외) ▲ 해외 파견 미국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공중보건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의약품 조달 등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 부여

■ 조선·해운 지원

※ Naval Vessels and Shipyards (Subtitle C) 등

- ▶ (개요) ▲ 조선 자동화 촉진 ▲ 인력 확보 권한 확대 등을 통해 美 조선·해운 산업 기반 강화 도모
- ▶ (조선·해운 산업 지원 전략 수립) 美 해군부에 대해 수상함 및 잠수함 건조 프로그램과 관련된 비용 및 일정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선·해운 산업 지원 종합 전략 수립·이행 의무 부과
 - 동 전략에는 ▲ 핵심 부품의 안정적 확보 ▲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급망 교란, 납기 지연 등의 문제 대응 방안 등의 요소 포함
- ▶ (조선 자동화) 조선 자동화 기술을 활용하는 3년간의 시범 사업 신설
 - 조선 자동화를 통해 건조 기간 단축 및 인력 부담 완화 도모
- ▶ (인력 확보) 美 해양 선박 승무원 등에 대한 보수 한도 상향 / 해군 건조·개조·수리 감독관 직위도 포함하도록 방위산업 기반 시설에 대한 직접 채용 권한 확대

■ 첨단기술, 제조 역량 강화 및 공급망 강화

※ ▲ Provisions Relating to Supply Chains and Domestic Sourcing (Subtitle D), ▲ Prohibitions and Limitations on Procurement (Subtitle E) 등

- ▶ (개요) ▲ 첨단기술 및 제조 역량 확대 ▲ 방산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및 대체 공급원 승인 촉진
▲ 전략 품목 공급망 의존성 완화
- ▶ (기술 및 제조 역량 강화) ▲ 유사시 민간 제조 역량을 동원할 수 있도록 민간 예비 제조 네트워크 설립 ▲ 첨단 제조 인력 육성 ▲ 첨단 건설 기술(3D 프린팅 등) 시범사업 시행 등
 - (방산) 국내 방산 및 핵심 소재 산업^{*} 지원을 위한 방위산업기금(Defense Industrial Base Fund) 확대
- ▶ (공급망 강화) ▲ 대비태세 핵심품목(critical readiness items) 우선 조달 ▲ 단일 공급원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한 이차 공급업체 자격심사 절차 가속화 등
 - (핵심 소재) ▲ 비축 관리자를 설치하여 국방부의 핵심 소재 획득 및 저장 능력 강화 ▲ 핵심 소재·광물을 대상으로 전략 소재 회수 및 재사용 프로그램 확대
- ▶ (전략 품목 의존성 완화) ▲ 광학 유리 ▲ 컴퓨터 디스플레이 등 품목의 특정 대상^{*} 공급망 의존성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행

* 품목별 상이 / 대체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포함

- ▶ (국방부 조달 제한) 국방부가 특정 대상^{*}이 공급망에 포함된 ▲ 첨단 배터리 ▲ 태양광 모듈 ▲ 핵심 광물을 전략 품목을 조달하는 것을 제한

* 품목별 상이 / 대체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포함

- (첨단 배터리) 첨단 배터리 및 셀의 구성요소가 특정 대상에 의해 소유·조달·정제·생산된 경우 원칙적으로 국방부 조달 제한 / ▲ 특정 대상이 아닌 곳에서 최종 조립 ▲ 구성 요소 비용의 95% 이상이 특정 대상 외에서 발생하는 경우 등 예외

- (핵심광물) 국방부가 몰리브덴, 갈륨, 게르마늄을 특정 대상으로부터 조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 / 미국 또는 동맹국 내에서 회수·재활용되는 경우는 예외

- (태양광) 국방부가 특정 대상이 생산한 태양광 모듈 또는 인버터를 조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 / 국방부 장관이 ▲ 대체 공급원이 없거나 ▲ 국가안보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은 적용 면제

- (적층제조 장비) 국방부가 특정 대상이 생산한 적층제조(3D 프린팅) 장비를 조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 / 정보전 등에 쓰이는 장비는 예외

- (컴퓨터) 국방부가 중국 소유·통제 기업이 관련된 컴퓨터 및 프린터 장비를 조달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중단

3. 평가 및 전망

■ (총평)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경제안보 정책은 ▲對中 견제 강화 ▲美 취약성 완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입법화되었으며, 미국 내 초당적 합의를 반영

- ▶ ▲ outbound 투자규제 강화 ▲ 바이오 분야 지원·규제 ▲ 조선·해운 지원 ▲ 전략 품목 공급망 강화 등 對中 견제 강화 및 美 취약성 완화가 국방수권법 경제안보 정책의 주요 골자
- ▶ 상기 경제안보 정책은 역대 최장기간 정부 셋다운 등 진영 간 대립 및 정치적 양극화가 격화된 상황에서 초당적 합의가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
 - 이러한 요소들은 초당적 합의를 통해 법제화되었다는 점에서 행정명령 등 대통령 독자권한 (presidential unilateral authority)에 기반한 여타 정책*과 비교하여 지속성 확보
 - * 예컨대, 관세와 관련된 명시적 법률이 아닌 대통령 비상 권한(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기반한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된 상호관세 정책은 다양한 국내적 반대에 직면하였으며, 현재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 범위를 둘러싼 사법 소송 진행 중
 - 다만, 법률의 명문에 구애받지 않고 대통령 권한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고려 시 정책의 구체적 이행 수준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
 - * 국방수권법 서명 과정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를 표명한 일부 조항(예, 의회 보고 의무 등)에 대해 헌법에 따라 부여된 대통령의 재량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언급

■ (outbound 투자규제) 국방수권법을 통해 해외투자심사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다만, 행정부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정책적 유연성 확보

- ▶ outbound 투자규제는 그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내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그동안 반도체 수출통제 등에 비해 제도화 수준이 낮았던 분야였지만, 이번 국방수권법 입법을 계기로 해외투자심사가 정식으로 법제화
- ▶ 국방수권법이 정책 집행에 대한 행정부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 주목 필요
 - 법 문안 상 ▲ 대통령의 외국인 제재 ▲ 재무부의 투자 금지 조항 등이 행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may)으로 규정
 - 5개 기술 분야 중 실제로 미국인의 투자가 금지되는 세부 분야도 재무부가 시행규칙을 통해 정하도록 규정
 - 이는 美 의회가 해외투자심사라는 제도적 무기의 사용 여부 및 시행 방식을 결정할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했음을 의미
 - 다만, 美 행정부는 의회 보고 등 절차 준수, 규제 부담 최소화 등의 의무는 부담
- ▶ 법률로 위임받은 outbound 투자규제 권한을 향후 美 행정부가 어떻게 활용할지 면밀한 검토 필요

-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상황적 필요에 따라 협상 거래적 관점에서 **對中** 견제 수위를 조절*

* 예컨대, 특정 기간 내 틱톡 강제 매각을 규정한 법률상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법의 집행을 행정명령으로 유예하며 틱톡 문제를 중국과의 협상으로 접근 / **對中** 수출통제 품목이던 엔비디아 H200을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엔비디아로부터 받는 조건으로 수출 허용

-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성향 고려 시, 향후 **對中** outbound 투자규제 수준도 **국내정치적 요인*** 및 **대외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

* **對中** 투자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미국 내 금융 자본의 선호 반영 여부 등

** 미중정상회담('25.10.30.) 계기 형성된 미중 긴장 완화 추세의 지속 여부 등

- 향후 발표될 재무부의 시행규칙 주목 필요

▶ 국방수권법은 또한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美** 행정부가 동맹·우방국과 협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필요

- 동맹·우방국이 미국과 유사한 투자규제 체제를 도입하도록 권장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바, 향후 미국의 동참 요청 가능성 대비 필요

■ (바이오) 미국 내에서 활발히 논의되던 바이오 분야의 전략적 중요성 및 **對中** 위협인식*을 반영하여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경제안보 정책의 제도화

* 바이오 분야의 경제안보적 중요성에 대한 미국의 인식 관련 최용호(경제안보리뷰 25-19호) 참조

▶ 우려기업과의 정부 계약을 규정한 국방수권법이 시행되면 의약품 공급망 및 기업 간 경쟁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곽수근 2025; 이권구 2025; 정지은 2024)

- 의약품 CDMO(위탁 개발 생산) 시장의 경우 기존 중국 기업에 의존하던 글로벌 제약사들이 미국, 유럽, 한국 등의 기업으로 거래처 전환 가능* / 유전자 시퀀싱 시장에서는 **美** 기업이 **中** 기업의 시장점유율 대체 가능(정지은 2024)

* 특히 세계 5대 바이오 의약품 CDMO 기업으로 꼽히는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의 타격 예상

- 일각에서는 한국 CDMO 기업들이나 유전 분석 관련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곽수근 2025; 이권구 2025) / 다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규제 대상으로 선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

* 예컨대, 바이오 규제 법안 초안은 우시바이오로직스를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으나, 이번에 통과한 국방수권법은 명시적으로 포함하지는 않은 상황

■ (조선·해운) 해군력의 기초가 되는 조선·해운 분야 부흥을 위한 미국의 의지 재확인

▶ 국방수권법은 특히 미국 군함 건조를 위한 자동화 기술 도입 등을 규정

▶ 다만, **美** 군함의 ▲해외 건조 금지 ▲해외 수리·보수 금지 등 **美** 국내법 조항을 개선하여 미국과 동맹국간의 조선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제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방수권법에는 未 반영(김원철 2025)

법/정책	내용
Byrnes-Tollefson Amendment (14 U.S.C. 1151, 10 U.S.C. 8679)	미국 군함이나 해당 선박의 주요 구성물은 외국의 조선소에서 건조 불가 - 국가안보 목적에 따른 일부 예외 인정
Maintenance of Naval Vessels (10 U.S.C. 8680)	美 군함은 미국 이외의 조선소에서 수리, 유지보수 불가 - ▲ 항해 중 수리, ▲ 공격에 의한 손상 수리 등 예외 인정

- 아울러 국방수권법 초안에는 신규 조선소 건설 시 한국과 일본의 투자 유치를 검토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이 담겼으나, 최종법에는 未 반영(김원철 2025)

■ (국방 공급망) 美 국방력의 근간이 되는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전략 품목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공급망 취약성 완화 및 산업 자립화 도모

참고문헌

- 곽수근. (2025.12.18.). “美 ‘바이오 보안법’ 이달 유력…K제약이 빈자리 채운다”. 『조선일보』.
- 김원철. (2025.12.18.). “미 의회, 국방수권법에서 ‘미 신규 조선소에 한국 투자’ 조항 삭제”. 『한겨레』.
- 이권구. (2025.12.08.). “미국 ‘생물보안법’ 내년 시행… 전세계 의약품 공급망 파장 불가피”. 『약업신문』.
- 정지은. (2024.11.29.). “미국 생물보안법 입법 동향과 산업 정책 시사점”. 『월간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 최용호. (2025.10.17.). “미국 신흥바이오기술국가안보위원회 「바이오 기술의 미래 설계」 보고서 분석”. 『경제안보 Review』 25-19호.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 Covington. (2025.12.17.). FY26 NDAA Outbound Investment Provisions Overview.
- Lehrer, Misha, Daniel Sennott and Michael Wilson. (2025.12.22.). FY 2026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A Comprehensive Holland & Knight Analysis. Holland & Knight Alert.
- Plitsch, Jennifer and Jennifer Bentley. (2025.12.10.). BIOSECURE Act Moves Closer to Enactment With Inclusion in FY 2026 NDAA Text. Covington.

저자 소개

최용호 | yhochoi22@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국제정치경제, 기술패권경쟁, 미국 국내정치와 경제안보정책의 관계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미일 기술패권경쟁과 미국의 경제적 대응: 민군겸용기술을 둘러싼 안보 논쟁과 통상마찰”(이승주 편. 2020, 『미중 경쟁과 글로벌 거버넌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전략”(경제안보리뷰, 23-7호), “틱톡 규제 동향 분석: 데이터 안보와 경제의 연계 가능성”(경제안보리뷰 23-16호), “미중 조선·해운 경쟁: 잠재적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경제안보리뷰, 24-8호), “美 대선 이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망”(경제안보리뷰, 24-19호) 등이 있다.

EWS 공급망/에너지 관련 모니터링 결과

(기간: 2025.12.17.~2025.12.31.)

※ 외교부는 핵심품목들의 글로벌 공급망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EWS)을 운영 중이며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서 별도 취합한 경제안보 관련 해외 동향을 종합하여 주요 동향 및 표로 정리

■ 美 Trump 대통령, 美 해군력 강화를 위한 ‘황금 함대’ 구상 발표(12.22)

- ▶ (주요 내용) 미국의 해군력 강화를 위해 신형 전함으로 구성된 황금 함대(Golden Fleet) 신규 구축
 - 황금 함대를 구성하는 신형 전함*은 3-4만 톤급 규모로 최신식 무장(극초음속 미사일, 고출력 레이저 무기 등) 및 핵전력(핵 탑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예정
 - *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신규 건조될 전함은 기존 함정보다 빠르고, 크며, 100배 더 강력할 것이라고 언급
 - 전함 2척의 건조를 우선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20-25척 보유 목표 / 이외 해군력 강화를 위해 잠수함(12-15척), 항공모함(3척) 등을 신규 건조할 예정
 - * 언론에 따르면 해군이 조만간 업체 선정 절차를 착수할 것이며, 첫 번째 함정은 2030년 도입 계획(WSJ, 12.22)
- ▶ (평가) 미국의 조선업 재건 및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해군력 확장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평가
 - 해군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나, 신형 전함의 건조 자체는 미국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미국 내 조선업 재건 강조*
 - * 관련하여 Hegseth 전쟁부 장관은 황금 함대는 억제력 회복, 군사력 강화, 산업 재건이라는 목표를 모두 달성 할 수 있는 훌륭한 구상이라고 언급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황금함대의 일부인 프리깃함 건조와 관련하여 국내 기업(한화)을 언급한바, 우리 기업과의 협력 동향 지속 관찰 필요

출처: 조선일보, 한국경제, 코리아헤럴드, Financial Times (12.23.) 등

■ 美 USTR, 301조 조사 결과에서 中 반도체 추가 관세 18개월간 보류 결정(12.23.)

- ▶ (주요 내용) 美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 중국산 반도체 추가 관세율을 0%로 설정
 - * 동 조사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2024년 12월 23일에 시작, 1년 뒤인 2025년 12월 23일 결과 발표/ 중국산 반도체는 트럼프 1기부터 바이든 행정부까지 현재 50% 관세를 적용받는 중
 - 동 조사 결과에서 미측은 중국이 반도체 산업 지배력(dominance)을 확보하려고 동원한 정책과 관행이 부당하며, 미국의 상업활동에 부담·제한요소로 작용한다고 지적
 -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을 비판하면서도, 추가 관세율은 0%로 설정 / 다만, 18개월 뒤인 2027년 6월 23일 관세율 인상을 예고

※ 구체적인 관세율은 2027년 6월 23일 30일 전에 발표할 예정

- ▶ (평가) 주요외신은 상기 조치를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관계 안정화를 모색하는 신호를 보내고, 중국발 회토류 수출통제를 둘러싼 긴장을 낮추려는 접근으로 평가

출처: 연합뉴스, USTR, Reuters, Bloomberg (12.24.) 등

■ 엔비디아의 내년 2월 H200 對中 수출 개시 가능성 제기(12.23.)

- ▶ (주요 내용)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NVIDIA)가 내년 2월 중순 설 연휴 전 인공지능 반도체 H200의 對中 수출 개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 보도
 - ※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수출통제 품목이었던 H200에 대해 25%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對中 수출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12.8.)
 - 다만, 中 당국 수입 승인 여부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
 - 한편, 일부 민주당 의원*은 상무부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H200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 수출 승인에 대한 동맹국의 반응 등에 대한 설명 요구
- * 엘리자베스 워런(상원), 그레고리 믹스(하원)
- ▶ (평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등 中 기술 기업들이 엔비디아 H200에 관심을 표명한 가운데, 미국 일각에서는 수출통제 약화가 中의 기술 굴기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우려

출처: 연합뉴스, Reuters (12.23.) 등

■ 美, 삼성·SK의 中 공장에 대해 '26년 한 해 동안 장비 반입 일괄 승인 확정 ('25.12.30.)

- ▶ (주요 내용) 당초 '25.12.31일부로 VEU(검증된 최종사용자) 지위가 취소될 예정이었으나, 금번 조치로 VEU 지위 종료에 따른 건별 개별 승인과 행정 마비 우려를 해소하고, 1년 단위 일괄 승인 확보를 통해 최악의 경영 불확실성 탈피
- ▶ (평가) 장비 반입 때마다 심사를 받아야하는 '건별 허가제'로 전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장 가동 중단(셧다운)이나 수율 저하 리스크는 당분간 방어 가능
 -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 조건 하 매년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3개월 단위' 보고 의무에 따른 피로감은 지속될 전망 /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연간 단위 필요한 장비 및 부품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공장의 의존도를 낮추고, 한국이나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확대하는 등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는 평가도 존재

출처: 파이낸셜뉴스, TV 조선 ('25.12.30.) 등

■ EWS 공급망

국가	일자	내용
중국	12.1.	[수출통제] 재중EU상공회의소(EUCCC), 중국 수출통제에 따른 영향 분석 조사 결과 발표
	12.2.	[소프트웨어] 공업정보화부, 2025.1~10월 소프트웨어산업 매출 13.2% 증가 발표
	12.2.	[희토류] 희토류 수출 허가 과정 간소화(로이터 통신) : 3개 기업에 첫 '희토류 수출 일반허가증' 발급
	12.8.	[교역] 상품교역액, 10개월 연속 전년 동기대비 증가세 유지(신화사, 12.8) : 11월 상품교역액 3.9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4.1% 증가
	12.12.	[철강] 상무부·해관총서, 일부 철강 제품 대상 수출허가증 관리 제도 실시 공고 : 내년 1.1일부터 생철, 합금철, 철궤 등 300개 철강 제품에 대해 수출허가증 관리 제도 실시 / 16년 만에 철강 수출허가증 관리 재시행
	12.12.	[자동차] 시장총국, 《자동차 산업 가격행위 준수 지침》 제정안 발표 및 의견수렴 실시
	12.15.	[자동차] 공업정보화부, L3 자율주행 차량 조건부 허가 : 창안社 및 지후社 L3 자율주행 차량 2종 조건부 허가
	12.15.	[반도체] 트럼프 행정부의 엔비디아 H200 對中 수출 허가 관련 중측 동향(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한구시보 영문판)) : (주요 내용) 中 정부는 H200 도입 대신 자국산 반도체(화웨이 Ascend 등) 사용 장려 / '반도체 자립화'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미국 침을 단기적 대체제로만 간주
	12.15.	[자동차] 공업정보화부, L3 자율주행 차량 조건부 허가 : 창안社 및 지후社 L3 자율주행 차량 2종 조건부 허가
	12.19.	[반덤핑] 상무부, 미국·한국·EU산 EDPM에 대한 반덤핑조치 일몰재심 조사 개시 공고
	12.26.	[금융] 인민은행 및 국가외환관리국, "국내기업의 해외 상장 자금관리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26.4.1 시행)" 발표 : (주요 내용) ▲해외 상장 조달 자금의 국내 환입 ▲금융기관 책임과 감독 의무 강화 등
	12.29.	[디지털화폐] 인민은행, <디지털 위안화 관리 서비스 체계 빛 유관 금융 기반 시설 건설 강화를 위한 행동방안> 발표
	12.29.	[관세]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2026년 관세 조정방안> 공고 : 일부 수입 상품 관세의 세율 및 세목 조정 / 2026.1.1.부터 시행 예정
	12.29.	[반도체] 정부, 中 기업들에 H200에 대한 제한적 접근만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중(FT)
미국	12.3.	[무역합의] 상무부,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의 관세 관련 요소 이행' 제하 사전공개열람 문서 발표 : 자동차 232조 관세 인하(25%→15%) 등 관련 사전공개열람문서 연방관보 게재
	12.3.	[자동차] Trump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중심 자동차 정책 전면 폐지 및 'Freedom Means Affordable Cars' 이니셔티브 발표 : 기업평균연비(CAFE) 기준 완화 및 전기차 전환 강제 정책 폐지
	12.3.	[미중관계] Trump 행정부, 中 국가안전부(MSS) 제재 계획 당분간 보류(FT)
	12.4.	[USMCA] USTR, USMCA 탈퇴 가능성 언급(Inside U.S. Trade)

국가	일자	내용
미국	12.4.	[수출통제] Max Miller(공화/오하이오) 등 공화당 하원의원 4인, 「ADVERSARIES Act」 발의 (Inside U.S. Trade) : (주요 내용) 수출통제법상 적대행위자(foreign adversary) 정의를 중국 군사 기업 및 美 상무부(BIS) 제재 기업뿐만 아니라 이들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계열사도 포함하도록 확대
	12.4.	[반도체] 상원 외교위 Pete Ricketts 동아태소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 및 Chris Coons 간사(민주/델라웨어), 「SAFE Chips Act」 발의(Bloomberg) : (주요 내용) 對中 AI칩 수출규제 완화 시도 차단을 위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북한·러시아·이란 등 적대국에 최첨단 반도체 수출을 최소 30개월간 금지
	12.5.	[미중관계] Bessent 재무장관 및 Greer USTR, 中 He Lifeng 국무원 부총리와 미중 정상 간 '부산 합의사항' 이행 현황 등 논의
	12.5.	[안보] 백악관, 트럼프 2기 행정부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 발표
	12.5.	[기업결합] 넷플릭스,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 발표 : Trump 대통령, 동 기업결합에 대한 우려 표명(12.7)
	12.7.	[국방]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 문안 대외 공개
	12.8.	[반도체] Trump 대통령, 美 국가안보 보장을 전제로 엔비디아의 중국 및 여타국의 승인된 고객 대상 H200 제품 출하 허용(Truth Social) :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블랙웰·루빈)은 금번 조치에 불포함 / 엔비디아는 25% 수수료 (fee)를 미국에 납부
	12.9.	[법안] Todd Young(공화/인디애나) 등 상원의원 4명, 「디지털무역 촉진 법안」 초당적 발의 : (주요 내용) ▲대통령에게 USTR을 통해 디지털 무역협정을 체결할 권한 부여 ▲의회에 이에 대한 검토·거부권 등 감독권 부여 등
	12.10.	[관세] USTR,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2027년부터 니카라과산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 등 결정
	12.10.	[국방] 하원 본회의,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통과
	12.11.	[무역] 9월 무역적자, 5년여 만에 최저 수준 기록(상무부 통계) : 상품 및 서비스(528억불) 기준 2020.6월(492억불) 이후 최저 / 상품(790억불) 기준 2020.9월(784억불) 이후 최저
	12.11.	[AI] 美 백악관, "국가 AI 정책 프레임워크 확보" 행정명령 발표 : (주요 내용) 주(州) 정부의 AI 규제에 우선하는 연방 차원의 AI 단일 표준 확립
	12.12.	[관세] 법무부 및 관세청, 코스트코 등이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한 관세 정산 집행정지 (Preliminary Injunction) 신청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12.12.	[경제안보] 「팍스 실리카 서밋(PSS, Pax Silica Summit)」 개최(워싱턴D.C.) : (참석국) 미국(주재),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UAE, 영국, 네덜란드, 이스라엘
	12.14.	[관세] 2024년 美 수입품 절반 이상이 무관세 또는 232조 등 여타 관세 적용으로 IEEPA 관세에서 제외(Politico) : 약 1.6조 불 규모 관세 대상 / 최소 1.7조 불 규모 무관세(커피, 바나나 등 농산품, USMCA 면제 품목, 무역 협상을 통한 면제 부여 등) 또는 232조 등 여타 관세 적용
	12.15.	[핵심광물] 고려아연, 美 테네시 클락스에 약 74억 3,200만 불 규모 제련소 건설 투자 발표

국가	일자	내용
미국	12.15.	[핵심광물] Tim Moore 하원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 하원의원 4명, 「핵심광물 무역안보 법안」 발의(Inside U.S. Trade) : (주요 내용) 美 무역대표부(USTR)에 수석 핵심광물 협상관(Chief Critical Minerals Negotiator) 직위(부대표급) 신설
	12.16.	[미일관계] 미일, 5천5백억 불 규모 공공 투자기금 첫 번째 투자 대상으로 에너지 프로젝트 검토 예정(Bloomberg)
	12.16.	[미중관계] USTR, 중국의 미중 1단계(Phase One) 무역합의 이행 여부에 관한 301조 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12.17.	[국방]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美 상원 본회의 통과 : 대통령 서명 시 공식 발효
	12.17.	[항공] 교통부, 국가 차세대 항공 모빌리티 전략 및 종합 계획 발표
	12.18.	[무역합의] Trump 행정부, 스위스와의 무역협정 협상 시한 발표 : 美, 스위스와의 무역협정 협상 시한을 2026.3.1.로 예상하며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관세 인하 계획 재검토 의향 표명
	12.18.	[제재] 행정부, 이란 그림자 선단(shadow fleet) 제재 발표
	12.18.	[우주] 백악관, 「미국 우주 분야 우위 확보」 행정명령 발표 : (주요 내용) ▲달 표면 원자로 배치 ▲2028년 달 착륙 ▲상업 우주 경제 활성화 ▲국가우주 위원회 폐지 등
	12.18.	[국방]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Trump 대통령 서명 및 공식 발효
	12.18.	[미일관계] 제1차 미일간 대미 투자 협의위원회 화상회의 개최(Bloomberg)
	12.19.	[틱톡] 바이트댄스, 美 투자자가 과반을 소유하는 Tiktok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계약 체결 발표(Bloomberg) : ▲오라클, 실버레이크(美 사모펀드), MGX(UAE 국부펀드 설립 투자사) 각 15% 지분 ▲바이트댄스 19.9% 지분 보유 예정
	12.19.	[의약품] Trump 대통령, 미국 내 메디케이드 의약품 약가를 낮추기 위한 9개 제약사와의 합의사항 발표
	12.22.	[디지털] 하원의원 Darrell Issa(공화/캘리포니아), 한국의 디지털 규제 관련 기고 (Daily Caller)
	12.22.	[조선] Trump 대통령, 美 해군력 강화를 위한 '황금 함대' 구상 발표 :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한 황금 함대 구상 및 신형 전함 건조 계획 발표
	12.22.	[항공] 연방통신위원회, 외국산 무인항공시스템(UAS) 장비인증 중단 발표 : 외국산 드론 등 무인항공시스템 및 그 핵심부품을 인증규제대상목록에 포함
	12.23.	[반도체] USTR, 중국 반도체 301조 조사 결과 발표 : 향후 18개월간 0% 관세 부과 / 2027.6.23.부터 관세 인상 예정
	12.23.	[G20] Trump 대통령, 2026년 G20 정상회의에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초청 (Truth Social)
	12.23.	[디지털] 국무부, 프랑스 국적 Thierry Breton 前 EU 집행위원(2022년 EU 디지털서비스법 (DSA) 제정 주도) 대상 비자 제한 조치 발표 : EU 집행위, 규탄 성명 발표

국가	일자	내용
미국	12.23.	[관세] 국제무역법원(CIT), IEEPA 소송 관련 심리 중단 행정명령 발표 : IEEPA 관세 환급을 청구하는 모든 신규 접수 사건 및 현재 배당되지 않은 사건의 심리를 중단 / 행정적 처리 원활화 목적
	12.23.	[디지털] 국무부, Thierry Breton 前 EU 내수담당 집행위원(디지털서비스법(DSA) 제정 주도) 등 5명의 EU 회원국 인사에게 비자 발급 제한 조치 발표
	12.23.	[반도체] USTR,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관보 게재 :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2027.6.23.까지 18개월간 보류
	12.26.	[수출] 2025년 멕시코 對美 수출 증가(WSJ) : 2025.1월~11월간 전년동기 대비 멕시코의 제조업 분야 對美 수출 9% 증가
일본	12.1.	[자동차] 야자키, 미쓰바 등 자동차부품 기업들, 인도 시장 공략 움직임(닛케이)
	12.1.	[인프라] 소지초社, 호주 철도 인프라 사업 진출 계획(닛케이)
	12.4.	[관세] 스미토모화학, 리코, 도요타통상 등 日 기업, 트럼프 행정부 대상 추가 관세 환급 소송 제기(닛케이)
	12.6.	[연구개발] 정부·여당, AI·양자 등 첨단분야 연구개발 기업 감세 확대 방침(닛케이)
	12.7.	[사이버보안] 정부, 새로운 사이버보안전략 책정 계획(닛케이) : IT 벤더 기업의 책무 명시 및 가이드라인 마련 방침
	12.18.	[일미관계] 일미 관세 합의에 따른 5,500억 달러 대미 투융자 관련 협의위원회 회의 개최 : 투자 대상 프로젝트 관련 의견 교환 및 협력 의지 등 확인
	12.23.	[일미관계] 일미 투자 관련 협의위원회 각료급 회의 개최 : 전략적 투자 이니셔티브 下 제1호 안건 조기 발표를 위한 조정 가속화 합의
EU	12.3.	[원자재] 집행위, 핵심원자재 행동계획(RESouRCE EU Action Plan) 발표
	12.3.	[화석연료]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 금지 입법(안)* 삼자협의 타결 * (주요 내용) ▲러시아산 가스 수입 영구 금지 ▲러시아산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 등
	12.3.	[경제안보] 집행위, EU 경제안보 강화 공동문건 발표
	12.4.	[산림] 유럽의회 및 이사회, EU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시행 1년 연기 잠정 합의
	12.5.	[디지털]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을 이유로 X에 1.4억 불 상당 과징금 부과 (Bloomberg)
	12.9.	[공급망] EU 공급망실사지침 개정(안) 삼자 협의 타결 : (주요 내용) ▲초대형 기업에만 실사 의무 부과 ▲실사 시 위험 기반 접근법 도입 등 기업 부담 대폭 완화
	12.10.	[기후] 유럽의회 및 이사회, 유럽기후법(ECL) 개정 관련 잠정 합의 도달
	12.11.	[경제안보] “EU 외국인투자심사규정 개정(안)” 삼자협상 타결 : (주요 내용) ▲외국인투자심사 대상에 EU 자회사를 통한 EU 내 투자 포함 ▲의무 심사 분야 (이중용도품목, 인공지능, 반도체 등) 도입 ▲향후 전략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조건 도입 예고
	12.11.	[산업] 집행위, 유럽산 우대 조항을 포함한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발표 예정(폴리티코)

국가	일자	내용
EU	12.11.	[반도체] 집행위, 독일 반도체 공장 보조금 승인 : ▲글로벌파운드리社 드레스덴 생산시설 확장(4억 9,500만 유로) ▲X-FAB社 에르푸르트 공장 신설(1억 2,800만 유로) 등 총 6억 2,300만 유로 규모 국가 보조금 지급 승인
	12.12.	[철강] 이사회, “EU 신규 철강 조치(안)” 수정안 채택 : (주요 내용) 연간 철강 수입쿼터 2024년 대비 47% 감축(약 1,830만 톤) 및 쿼터 할당 외 관세율 50% 적용 등
	12.16.	[배터리] 집행위, EU 내 배터리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배터리 부스터 전략(Battery Booster Strategy)’ 발표 : (주요 내용) ▲금융 지원을 통한 역내 생산 확대 지원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 구축 지원 ▲외국인투자에 대한 기술이전 등 조건 부과 ▲EU 역내산 우대 등
	12.16.	[자동차] 집행위, 자동차 산업 정책 패키지(Automotive Package) 발표 : (주요 내용) ▲자동차 탄소 감축 목표 90%로 하향 조정 및 2035년 내연기관차 금지목표 철회 ▲역내 배터리 생태계 구축 지원 ▲자동차 분야 규제 간소화 등
	12.17.	[탄소] 집행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 개정안 발표(12.17) : (주요 내용) ▲하류재로 범위 확대 ▲제도 우회 방지 등 실효성 강화
	12.19.	[협정] EU 정상들, EU-Mercosur 무역협정 서명 내년 1월로 연기 합의
캐나다	12.19.	[USMCA] 정부, 2026.1월 미측과 USMCA 검토 논의 개시 예정 발표(Inside U.S. Trade)
대만	12.19.	[수출통제] 경제부, 전략성 첨단기술 화물 수출 관리대상 추가 : 무기 확산 활동과 연관된 213개 대상을 신규 관리대상으로 추가
영국	12.1.	[의약품] 정부, 영-미 의약품 관세 협상 타결 발표
	12.9.	[사이버보안] 정부, 中 사이버 공격 기업 2곳에 대한 제재 발표
호주	12.12.	[조선] 짐 찰머스 재무장관, 한화의 濟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 확대 조건부 승인 결정
네덜란드	12.9.	[반도체] ASML, 지난해 중국 방산 관련 기업에 반도체 제조 장비 및 핵심부품 판매 (Nieuwsuur)
독일	12.3.	[리튬] 독일·호주, 濟 벌컨 에너지社 라이언하트 리튬 개발 프로젝트 공동 지원 발표 : ▲獨 정부, 원자재펀드를 통해 최대 1억 5,000만 유로 지원 예정 ▲濟 정부 수출신용기관 EFA, 1억 2,000만 유로 투자 승인
	12.15.	[화학] 연방정부, ‘화학산업 2045 아젠다(Chemieagenda 2045)’ 출범
	12.18.	[제약] 독일 바이오텍(BioNTech)社, 경쟁사 큐어백(CureVac) 인수 완료
	12.18.	[배터리] 폭스바겐, 자체 배터리 생산 개시 : 폭스바겐(VW) 그룹 배터리 자회사 파워코(PowerCo), 잘츠기터 공장에서 배터리 셀 생산 개시
스웨덴	12.3.	[기술] 기술 분야 스웨덴 기업 협의체 ‘테크 스웨덴(TechSverige)’, 스웨덴 기술 산업의 성장 분석 보고서 발표
	12.18.	[정책] 정부, 자유무역과 국제 협력을 위한 Made with Sweden 이니셔티브 출범 : (주요 내용) ▲기업 지원 시스템 현대화 및 무역 장벽 제거 노력 ▲중소기업 해외 진출 강화 ▲수출 금융 시스템 강화 ▲고급 인력 유치

국가	일자	내용
스위스	12.5.	[무역합의] 연방각의, 미국과의 무역협정 교섭지침 초안 채택
	12.10.	[관세] 경제부, 미국 관세 인하(39%→15%) 11.14부 소급 적용 발표
	12.19.	[제약] 로슈, 노바티스 등 9개 제약회사, 미국 정부와 약가 인하에 합의
튀르키예	12.20.	[반덤핑] 무역부, 주석도금강판 반덤핑 조사 결과 발표
멕시코	12.10.	[관세] 수입 관세 인상(안), 하원·상원 본회의 통과 : 26.1.1.부터 시행 예상
	12.21.	[USMCA] 경제부장관, USMCA의 조기 재검토 개시('26.1월) 및 마무리 가능성 언급
	12.29.	[관세] 非FTA 체결국 대상 수입 관세 인상을 위한 「수출입일반세법(LGIE) 개정령(Decreto)」연방 관보 게재 : 2026.1.1일 시행 예정
칠레	12.14.	[선거] 대통령 결선투표 실시 : 공화당(극우)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Jose Antonio Kast) 후보 당선 / 58.2% 득표
	12.22.	[우주] 칠레 국립우주센터(CEN) 개소
베트남	12.1.	[산업] 베트남-라오스 산업 연계망 개발 양해각서 체결 : ▲ 시멘트, 철강, 강철 등 자재 산업 ▲ 화학산업 ▲ 섬유 및 신발산업 등 협력 강화
	12.11.	[광물] 국회, 지질광물법 개정안 통과
	12.18.	[희토류] LS 에코에너지, 베트남에 약 285억 원 규모 희토류 금속 사업 투자 계획 승인 발표 : 호치민시에 희토류 금속화 설비 구축 계획
	12.19.	[철도] 베트남 라오까이-하노이-하이퐁 철도 노선 착공식 개최
인도	12.5.	[정상회담] 인-러 정상회담 개최 : 에너지 동맹의 제도화 및 방산 협력 구조 재편 등 도모
	12.7.	[조선] HD현대, 인도 타밀나두주 투투쿠디 메가 조선소 구축 계획 발표
	12.22.	[FTA] 인도-뉴질랜드, FTA 타결 발표 :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양국 간 경제적 연계 대폭 강화
인도네시아	12.1.	[니켈] 인도네시아 니켈 산업 동향 관련 칼럼 게재(Reuters) : (주요 내용) 중국의 수요 감소, 공급 과잉,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인도네시아 니켈 산업의 자원 함정(resource trap) 직면 현황
	12.10.	[무역합의] 인니-미국 무역 협상 결렬 위기 보도(FT)
	12.23.	[무역합의] 정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합의 발표
콩고민주 공화국	12.19.	[광물] 광업부, 구리·코발트 소규모 영세 채굴 활동 중단 조치 : ▲ 소규모 채굴 부문의 비규제 및 환경 문제 개선 ▲ 가치 사슬 내 질서 회복 ▲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지속가능 채굴 촉진 등 목적

■ 에너지

국가	일자	내용
EU	12.10.	[정책] 집행위, “유럽 그리드 패키지” 및 “에너지 고속도로” 이니셔티브 발표
호주	12.22.	[가스] 정부, 국내 가스 유보 제도(domestic gas reservation scheme) 도입 발표 : 가스 수출업체에 가스 생산량의 15~25% 국내 시장 공급 요구
아르헨티나	12.4.	[LNG] Shell社, 아르헨 국영가스사(YPF) LNG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 「Argentina LNG 2」 사업 불참 발표
베트남	12.2.	[에너지] 베트남 부총리, 국가 핵심 에너지 프로젝트* 발표 * ▲화력발전(21개), 수력발전(9개), 해상 풍력발전(2개) 등 32개 전력원 프로젝트 ▲ 7개 LNG 저장소 프로젝트 ▲ 7개 가스-전력 연계 프로젝트 등 포함
	12.8.	[원자력] 일본의 베트남 닌투언 2 원전 프로젝트 철수 보도(Reuters)
	12.14.	[LNG] 베트남 년짝(Nhon Trach) LNG 복합화력발전소 준공식 개최
	12.12.	[원자력] 인도 내각, 원자력 분야 통합법안 Atomic Energy Bill 2025 승인
인도	12.12.	[원유] 최근 5개월 중 대러 원유 수입 규모 최고치 기록(ET) : 11월 인도의 대러 원유 수입액 26억 유로로 전월 대비 약 4% 증가
	12.18.	[원자력] 의회, 통합 원자력법 통과

「경제안보 Review」 2026년 발간 목록

발간호 (발간일)	구분	제목	저자명
26-1호 (2026.1.9)	분석	2025 미국 국가안보전략서 분석: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이재원
	분석	EU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통신문'주요 내용 및 분석	임산호
	현안	미국 국방수권법과 경제안보: 투자, 바이오, 조선, 공급망	최용호



온라인 다운로드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게시판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

경제안보 Review - 메일링 서비스 신청

cesfa@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CESFA,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는
공급망, 첨단 기술, 전략 산업 등의 주요 경제안보 현안 대응에 필요한 정책 분석과
국내외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Review는 격주로 발간되는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정기 발간물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정확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전달하여
민관합동의 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지의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